

2017 지역문화네트워크 대전포럼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

- 일 시 : 2017년 6월 30일(금) 15시~ 7월 1일(토) 12시
- 장 소 : 대전 전통나래관
- 주 최 : 지역문화네트워크, 부산MBC 부설 (사)문화도시네트워크
- 후 원 : 대전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대전민예총, 한밭문화마당, 로쏘(주) 성심당

2017 지역문화네트워크 대전포럼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

어떤 나라이건 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대 전제하에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충실히 실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지역문화네트워크는 새 정부와 지역문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나아갈 방향,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일** 시 : 2017년 **6월 30일**(금) 15시 ~ **7월 1일**(토) 12시
(접수는 6월 30일 14시 30분~)
- 장** 소 : 대전 전통나래관 5층 강당(대전시 동구 칠갑2길 2 / ☎ 042-636-8063)
- 주** 최 : 지역문화네트워크, 부산MBC 부설 (사)문화도시네트워크
- 후** 원 : 대전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대전민예총, 한밭문화마당, 로쏘(주) 성심당
- 참** 석 : 지역문화네트워크 단체 및 관계자, 문화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문의** 신청 : (사)문화도시네트워크 051)760-1494

▶ 일정

좌장 : 지금중(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일자	시간계획	내 용	진 행
6/30 (금)	14:30~ 15:00	접 수	접수 및 등록
	15:00~ 15:10	개회 및 인사말	개회사 : 이종훈(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부산MBC 부설 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총장) 환영사 : 이현주(대전시 정무부시장) 축 사 :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15:10~ 15:30 (20분)	발제 1	“19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의 과제”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 위원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15:30~ 15:50 (20분)	발제 2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 김기봉((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상임이사)
	15:50~ 16:00	유 식	—
	16:00~ 16:40 (40분)	토 론	강태호(동국대 교수) 김윤승(지리산문학관 관장, 자연치유학명예박사) 박상문((사)해반문화사랑회 이사) 이춘아(대전문화재단 대표) 조성진((사)한국영성예술협회 예술감독) 전고필(대인예술시장 총감독)
	16:40~ 17:00 (20분)	자유 토론	전체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의 시간
	17:00~	석 식 및 뒤풀이	—
	21:00~	자유 시간	숙소 배정 및 취침
7/1 (토)	09:00~ 12:00	지역문화 현장탐방	대전의 원도심 투어 ▶ (구)정동교회를 리모델링한 문화공간 ‘구석으로부터’ ▶ 민간 레지던시 사업, 소재 창작촌

2017 지역문화네트워크 대전포럼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

| 목차

발 제		
1. 19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의 과제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1
2.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	김기봉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상임이사)	41
토 론		
1. 문화유산 활용 확대로 지역문화 진흥	강태호 (동국대 교수)	59
2.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에 대하여	김윤송 (지리산문학관 관장, 자연치유학 명예박사)	61
3.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	박상문 ((사)해반문화사랑회 이사)	65
4.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 ‘(가칭)지역문화진흥원’ 설립을 요구함	이춘아 (대전문화재단 대표)	75
5.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조성진 ((사)한국영성예술협회 예술감독)	79
6.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은 누가 수립하는가?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83

발 제 1

19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의 과제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19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의 과제

박종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1.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후보자 별 문화정책 공약

가. 장미대선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장미대선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였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 적 촛불 저항이 만들어준 유례없는 대통령 보궐선거였으며, 15명의 후보가 난립한 선거였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만 해도 6명이나 되었으며 이중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 초청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 국회 의석 5석 이상의 정당의 후보자, 후보자 등록 직전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여론 조사에서 3%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후보자, 지지율 5% 이상의 후보자만 해도 5명이나 되는 역대 유례없는 다자구도 선거였다. 이렇게 넓어진 민주주의의 지평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정책선거로 진행될 여건은 높았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이 앞선 형식의 TV 토론회가 개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문화정책은 실종이라고 해야 할 정도의 부재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고 50여일 지난 시점이며, 새로운 문체부장관이 임명 된 지 불과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절정에 있었던 4월과 5월에 문화정책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였고 어떻게 쟁점을 형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어떤 면에서 현주소 국가단위 문화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문화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후보자 별 10대 공약과 문화관련 공약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것을 새 정부의 문화정책을 가름하고 지역문화가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 지점으로 삼기로 한다.

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별 10대 공약의 주요 구성

1) 10대 공약 중 문화관련 이행과제의 축소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입후보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때, 10개의 공약을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보통 이것을 대통령 후보 10대 공약이라고 부르는데 선관위는 이것을 제출받아 후보자 별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근거로 쓰이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정보제공 차원이겠으나 후보자 별 10대 공약은 당선자가 가려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공의 약속을 선거에 당선 된 사람이 당선 이후 잘 실천하는지를 가름 하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매우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어 선관위가 제공하고 공약실천여부를 관리하는 10대 공약으로만은 어떤 후보자의 전제적인 공약을 모두 다 담기에 어려움 지점도 있어왔다.

후보자 별 10대 공약은 대개 경제 외교 안보 등과 같은 주요의제에서 결정이 되고 문화관련 공약이라 분류하는 “문화일반·예술·문화재·관광·체육” 등과 관련된 공약은 10대 공약에 아예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비교의 지점을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 둔다면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의 문화공약이 눈에 잘 안 띄는 현상은 이례적이다. 지난 18대에서는 <창조경제>, <과학기술·문화강국> 등 직접적인 문화관련 공약이 전형적인 양자구도를 이뤘던 두 후보자 모두에게서 중요한 공약으로 발견되고, 확대하여 더 찾아보자면 <생애주기별 복지확대>, <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이 제시되었고 그 하위로 설정되어 있는 이행과제는 “차별 없는 문화 복지”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있었으며 “사는 곳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문화” 등으로 공약이 구체화 되어 10대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런 공약들은 문화분권 등과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문화복지, 지역문화의 바탕을 강화하는 정책이었으므로 이와 비교한다면 19대 대통령 선거의 10대 공약의 문화공약 부재현상은 지난 18대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2) 주변부 의제의 약진과 문화의제의 후퇴.

19대 대통령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국가적 쟁점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선거이다. 이러한 쟁점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블랙리스트문제는 모두 문체부 관장 업무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구속(2017년 1월 21일)의 구체적인 사유가 되었으며, 문체부 업무 영역에서 문화산업,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구속(2016년 11월 12일)이 되었고,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의 구속(2017년 1월 30일)등으로 관련인사들의 구속이 이뤄지고, 결국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2016년 12월 9일)에 이어 헌법 재판소가 최종 대통령 탄핵(2017년 3월 10일)을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유진룡 문체부 장관의 면직과 ‘참 나쁜 사람’으로 불린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해임이 대통령이 공무원 인사권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탄핵 인용의 구체적인 사유는 되지 못하였으나 주요한 탄핵 배경이 되었다. 특히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와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건이 문체부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야 할 입장이 후보자들의 입장이었으므로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쟁점이 문체부 영역에서 형성될 가능성은 높았으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책영역 안에서 더 넓고 더 깊게 문화관련 정책들이 기대에 부응할 만한 큰 정책쟁점을 형성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진행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문체부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리 단순하거나 혹은 쉽게 대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있지 않고 지난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그동안의 선거에서도 문화 관련정책은 정치·경제·국방·외교 등의 중요 의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변부 의제에 속하였다. 이런 의제에서의 중요도의 차이가 결국은 문화관련 예산의 후순위의 문제를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존재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여성·환경·노동 등과 함께 주변부 의제로 취급 받아 왔는데,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에 걸쳐 여성·환경·노동 등과 관련된 공약들이 후보자들의 1호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10대 공약에 주요 공약으로 포진되어 있다.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과 같은 공약들이 후보자들의 1호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의제 측면에서 주변부 의제들이 그 중요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고 복잡하고 쉽게 해결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배경은 있으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정책은 여전히 주변부 공약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나. 후보자 별 10대 공약 중에서 문화관련 이행과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공약 안에서의 문화관련 이행과제를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체계는 총 12개의 공약 구조를 갖는데 공약의 후보자 공약의 최종완성은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4월 28일에 와서야 비로소 이뤄졌다. 당초, 4월 15일~16일의 후보자 등록 당시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후보자 군에서 발견되는 10대 공약에 접근하는 방식은 후보자의 전체 공약체계를 허물고 중요도 혹은 후보자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약을 축소 병합하여 10대 공약으로 재구성 하는 방식이 발견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속에 문화·예술·문화재·관광·체육과 관련된 문화관련 공약이 전체적으로 실종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4월 3일 하루 전인 4월 2일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열렸던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와 같은 행사에서 나중에 후보자 문화관련 공약의 이행과제로 제시된 <앵페르미땅>, <예술인 표준계약서 도입>과 같은 정책대안이 발표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일정한 공약체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나 여하한의 이유로 10대 공약에는 문화관련 공약이 포함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물론 단지 이것 때문에 문화관련 공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였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자의 경우도 10대 공약에 문화관련 공약은 실종되어 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4월 22일에 이르러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한 문화공약과 이행과제를 별도로 발표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와 차 순위 지지도를 얻은 후보가 함께 10대 공약에 문화관련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자면 확연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10대 공약 중에 9번째 순위로 환경과 묶어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라는 환경·문화공약을 제시하였다. 후보자의 총 8개의 문화관련 이행과제를 재구성 축약하여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 공동체 구현'이라는 것으로 압축하여 10대 공약에 포함 하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자의 1호 공약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여성·복지·인구경감 대책 관련 공약이었다. 유승민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4위 공약이 분류상 문화관련 공약이었는데 세부 이행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예술·관광·문화재·체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미세먼

지·화학물질·원전불안 해소에 대한 환경관련 삶의 질 향상의 문제를 이행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를 광의의 문화개념으로 해석하는 범위조차도 일정하게 넘어서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공약 순위 9 순위로 ‘탈핵 공정한 언론과 문화국가’라는 공약에 문화관련 공약을 포함하여 정의당 대통령 선거공약 6개의 문화공약을 5개로 압축·재구성 하여 10대 공약에 제시하였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전체 주요 후보자 5명 중에서는 문화관련 이행과제가 주요 후보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문화공약 이행과제 전체를 빠짐없이 10대 공약에 포함하였다.

주요 후보자 5명 중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한 사례는 안철수·심상정 후보에게서만 발견되는데 이것은 과거 선거와 비교해 보아 다소 부족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속에 문화관련 이행과제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전체적으로 10대 공약 중에서 문화관련 이행과제들이 진입에 실패하고 부재에 가까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우선 여전히 문화·예술·문화재·체육·관광 문화관련 공약이 주변부 공약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지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동안도 문화관련 공약들이 갖는 선거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문화는 이제 살만해졌다고 속살대며 그럴듯하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힘든 세상살이를 위로”하며 세상을 적당히 꾸미는 포장지로서의 역할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이것마저 축소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다. 후보자 별 문화관련 공약의 비교.

1)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관련 공약체계

19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5명의 후보자들의 문화관련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관련 공약은 공약의 큰 열개는 ‘지난 두 번의 정부 문화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최종 목표 하위로 총 8개의 이행과제가 설계되어 있다. 이행과제의 구성배경은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 등의 5개 문화권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문화정책 환경을 출발점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여기서 국민이면 누구나 문화를 누릴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문화권을 분명히 하는 8개 이행과제를 설정, 제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공약은 가장 먼저 블랙리스청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1)예술인 복지 강화 공약, 2)창작권 강화 3)생활문화 활성화, 4)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5)문화유산 가치제고 6)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등을 주요 이행과제로 설정하였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가 문화자치권과 맞물려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특화하여 방점이 찍혀 있는 이행과제이다. 원인-결과 관계가 분명한 공약형태로 이중에서 지역문화와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문화자치권의 부재-문화격차해소>로 구성된 공약체계이다.



문화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 문화자유권 ● 문화창작권 ● 문화경제권 ● 문화향유권 ● 문화자치권

문화자치권	● 지역문화재정 부족으로 국가 이전 재원에 의존 ○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로 '2할 자치'라는 근본 한계 ○ 지역의 자율적 사업기획과 투자 어려워 ○ 지역 문화수요가 아닌 정부 지원 방향에 따라 사업전개 ● 지역문화재단의 정부 위탁기관화 ○ 획일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 반영 한계 ○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직 증가로 경영 악순환 ○ 한교예술강사 근로계약 문제를 지역문화재단에 전가, 이를 거부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정 취소
-------	--

기본원칙

● 자율 ● 분권 ● 협치

문화공약

1.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2.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5. 창작과 유통에서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6.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ی겠습니다.
7.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8.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9.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1)

1) 2017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발췌 편집. (양현미 상명대학교, 2017. 4. 27. 가극단 미래 외 81개 단체)

2) 후보자별 문화관련 공약체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창작지원 공간 구성 및 지원, 청년문화 콘텐츠 지원 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구축, 스마트 문화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 문화재 관리 강화, 생활문화 시설확충을 통한 생활문화 강화, 보통 한류산업이라고 하는 한지 등 우수한 전통문화 복원사업 강화 등이 문화 관련 핵심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총 10개의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지역문화 시설 활성화와 지역축제 활성화를 이행과제에 포함하여 지역문화의 중요도에 대해 어느 정도 비중을 실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밑으로 주요공약을 설계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복지, 문화산업, 문화다양성, 관광산업 강화의 4대 구분 하위로 8개의 이행과제가 설계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주요이념은 정책과 예술현장이 추구해 왔던 <문화사회>와 <문화국가> 이념이 차용되어 있다. 당면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차원의 대안은 가칭)문화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이행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고갈을 향해 가는 문예진흥기금의 확충과 예술인 복지대책으로 예술노동센타를 만들어 문화예술인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이행과제도 제시되어 있다. 문화재를 일대 정비하고 작품의 저작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을 포함하는 융·복합 콘텐츠로 대중문화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총 8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되었다. 지역문화와 관련한 정책접근 방식은 지역문화 시설확충을 이행과제에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역소외를 계층소외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문화정책 공약은 전체적으로 문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두고 한류산업 육성을 특정하고 강조하여 제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화예술인 보호법 등 법제도를 일대 정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도 주요 이행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강조되어 주요 이행과제로 내세웠다. 전체적으로는 주요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11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체육관련 공약이 강화되어 있고, 여기에 체육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부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의지도 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공약구성과 이행과제의 접근 방법론은 이념을 세우거나 문화정책의 전환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안과제를 특화하여 공약으로 나열한 설계로 보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별도로 목표체계를 따로 세우지 않고 6개의 문화예술 이행과제를 제시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과제 첫 번째가 사회적 쟁점이 된 블랙리스트 방지 대책으로 “부역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을 먼저 서술하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법률을 입법하고 문화예술의 근본 가치를 재확립 하겠다는 목표를 이행과제의 맨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총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행과제가 문화관련 공약의 목표체계를 대신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가 이행과제로 구성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행과제의 구성은 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예술인 복지확대, 문화예술 정책과 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 강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로 구분하여 별도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예술지원 즉, “예술인 지원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약하였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30년이 넘게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을 상대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정책의 전환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행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1>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 별 문화체육관광 공약 (*표 지역문화관련)

후보자	공약	비고
문재인	1. 예술인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2. 예술인 창작권 보장 3.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5.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높임 6.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 7.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 8.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8개 과제 중 관광 1, 체육 1
홍준표	1. 청년문화인·청년콘텐츠 인을 육성하고 일자리창출을 지원 2. 생활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문화격차를 해소* 3. 집단 창작촌 등 문화예술인들의 맞춤형 창작공간 확충 4.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체육인 일자리 창출 5.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방안 마련 6.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시장다변화 대응 7. 스마트문화관리제도도입 및 법·제도 정비로 문화재 관리 강화 8. 한지 등 전통문화유산 원형 복원사업 추진 9.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및 자연유산 정책 강화 10. 지역 문화유산축제 활성화*	10개 과제 중 체육 2, 관광1
안철수	1.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 2. 문화가 있는 삶과 행복공동체 구현* 3.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4. 전통의 창조적 계승 및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6.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 구현 7. 선진 체육 생태계 조성 8. 융복합관광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 선진화	8개 과제 중 관광1, 체육1
유승민	1. 고령세대를 위한 부가수익형 문화향유사업 추진 및 지역별 창작 플랫폼 구축 2. 초중고 예체능 교육 커리큘럼 개발 3.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정책 확대 및 추진 4.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5. '스티브잡스'를 육성하는 민·관·학 협동 대학수업 개설 6. 글로벌 한류 팬덤 강화를 위한 코리아센터 확대 개편 7. 문화예술 근로자 표준계약서 도입 및 사용 의무화 공언	11개 과제 체육 2.

	기획사 등록제 실시 8. 전국체전과 연계한 문화예술대제전 개최 9. 독립영화 예술전용영화 전용관 확대 및 계열사 간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10. 평창동계올림픽 집중 지원 및 운영재정 건전화 11. 체육청 설립	
심상정	1. 블랙리스트 방지법과 문화예술 가치 확립 2.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3. 문화예술 정책, 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4.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5.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6.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정책의 전환	

라. 후보자별 문화관련 공약의 비교.

1) 주요쟁점의 후보자별 문화관련 이행과제의 비교.

19대 대통령 선거의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총평 하고 쟁점이 분류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예술인정책, 문화예술교육으로 한정하여 후보자별로 이를 비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 관련공약은 문화·예술·관광·체육 전 분야를 모두 빠뜨리지 않고 총망라하고 쟁점을 들어낸 공약의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계층별 지역별 접근을 통한 다양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콘텐츠와 영화산업 등에 탄탄한 설계도 눈에 띈다. 4차 산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과 관광 체육의 핵심쟁점 등을 이행과제에 포함하여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대안 체계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도 발견되고 있다. 앞서서도 열거하였지만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다소 과제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어 후보자 중에 가장 많은 1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지만 과제중심의 한계가 있어 적어도 국가단위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는 성숙이 필요하다는 느낌도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간단한 구조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으며 어떤 이행과제의 대안은 연구 사업으로 풀겠다는 대안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문화정책과 공약에서 각 후보자간의 확연한 구분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쟁점에 접근하는 태도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고 행정을 쇄신하여 재발을 방지 한다는 차원 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문제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의 공약에서 공히 함께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각 후보 사이에 표현 방식과 농담(濃淡)의 차이는 있으나 그 중요도를 인식하고 현실적인 개선안과 대안을 찾는 다는 면에서 동일한 대응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술인복지에 대해서도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군에서 대안 체계의 유사성이 있다.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면 후보자 별로 차이가 있고 그 차이와 다름은 결국 후보자의 국정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후보자들의 문화관련 공약의 설계는 블랙리스트라는 특별한 사

안에 접근하는 차이를 제외 한다면,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발견되었던 문화관련 공약체계의 유사점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쉽표가 있는 삶>과 안철수 후보의 <문화가 있는 삶>은 자귀선택과 표현방식 즉, 워딩(wording)의 차이만 존재 할 뿐 정책의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는 목표 체계이다. 굳이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분류를 하자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군이 유사점이 있었다면, 이와는 달리 홍준표·유승민 후보자의 공약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같이 문화관련 공약체계와 이행과제가 후보자 상호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나타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1)결국 아직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과제만 무수하고 실현된 것은 부족한 여전히 발전단계에 있다는 것과 2)여전히 시혜적인 문화정책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후보자군 대부분에서 유사한 지점이 있다. 제도를 “내려 쫓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새롭고 기발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현장은 지원금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때문에 제도에 적응하는 형식이 반복됨을 의미하는 일이다. 정책의 전환이라 함은 관행을 바꾸는 것으로 현장예술계가 필요성을 제기하면 행정이 이를 받아 행정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제도를 최대한 벌려 만들고 실행 안으로 다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전반에서 발견되는 한계는 예산 즉, 돈을 들여 기발한 제도를 만들어 현장에 베푸는 시혜적인 정책으로 이해하는 한계가 여전히 나타나는 “내려 쫓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3)이른바 문화사회 이론, 즉 정치경제를 문화가 결정하는 방식에서 이미 시장경제의 모든 가격결정을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 문화 또는 문화적 요인이 결정하는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였음에도 여전히 정책전반에서 발견되는 한계는 정치경제 영역에서 사회문화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구조의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한계가 역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극복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2> 주요 후보자의 문화예술 쟁점 3대 공약 정책별 비교2)

과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지상조사 및 사후대책 마련 ·정부-지원기관-문화계간 공정성 협약 ·지원기관 독립성 보장 ·지원정책결정 예술인 참여 확대 ·문화음부즈만 도입	·언급없음	·블랙리스트 백서 작성 ·문화행정혁신위원회 구성 ·예술인 옹부즈맨 위원회 시행 ·콘텐츠진흥원해체 출판진흥원개편 ·공공기관 위원장 호선제 도입	·언급없음	·부역자 엄중 처벌 ·블랙리스트 방지법제정 ·문화예술관련 법안 일대정비
예술인 복지	·표준계약서 의무화 ·경력 활동 유형에 따른 표준 보수 지급 기준 제정 ·예술인 실업급여 (양트리미팅) 제도 도입, 예술인 보험료 부담 일정한 국가 부담 ·예술인 복지금고지 제도 신설 및 지원	·비전, 폐교 리, 모 델을 창작 공간 제공 ·청년 문화인턴제 도입 및 채용 ·문화적기업 인증 제	·(가칭) 예술노동자 워싱턴 예술인 근로조건 개선 ·예술인 복지법 개정, 예술인 복지기금 조성 ·문화콘텐츠 저작권 강화, 유통 불공정 해소 ·문화관련 세제 개편, 소액 펀딩 활성화	·문화예술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 도입 ·공영기획회사 등 록제 실시	·표준계약서 세분화 도입 ·예술인 노동 기본권 보장 및 사채 보험 지원 확대,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예산 대폭 확대,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문화예술교육	·유아 창의놀이 교육확대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블라드 아난탈로) 조성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교육강화,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교육 확대 ·50+ 세대를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운영 등	·65세 이상의 노인 공공문화기반시설 무료 프로그램 강료 50% 할인	·학교·지역경합 창의 문화교육 강화 ·자치분권 공동체 미디어교육활성화	·초중고 예체능 커리큘럼 개발 ·스포츠 대중문화, 예술, 전통문화 등 1인1기 교육 프로그램 개설	·문화예술교육 중 합계회 수립

2) 문화소의 극복에 대한 후보자간 정책 비교.

문화소의 극복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라 할 수 있는 지역소외와 계층소외에 대해서 전 후보자군에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역문화 부양과 계층소외 극복방법론에 대한 후보자간의 접근은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지리적 소외 문제와 계층소외 문제를 구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후보자 군으로 분류하면 문재인·심상정 후보군에서 지역소외와 계층소외를 구분하여 정책에 접근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후보군에서는 지역소외의

2) 김선경, 박인아, 김대열 (매거진 플레이디비)의 쟁점 비교표를 보강하고 첨삭함.

문제를 계층소외와 다소 혼재하여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 지향>이라는 <예술의 힘>의 지역문화 목표 설정 이후로는 지리적 지역소외와 계층소외를 지역문화 면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접근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문화소외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대안 설계에서는 후보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낙후지역 우선 지정과 같은 차별성 있는 대안이 나왔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층소외 극복 방법론과 문화권 보장 차원의 제도라 할 수 있는 문화통합 이용권의 상향조정의 경우에도 중복해서 후보자 간에 이행과제로 발견되고 있다. 후보자 중에는 문화권이 포함된 지역사회복지계획 하위로 기초문화예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표3>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별 지역·계층 문화격차 해소 방안 비교

과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지역문화활성화, 문화격차 해소	·문화지수 개발, 낙후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진흥 기금 확충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보장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 연계 강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조정, 65세 이상 신규 수용 ·문화도시 지정 예산확대 지원	·필수 문화기반 시설 확충 ·기초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의무화 ·(가칭)문화행복 지원센터 설립, 문화기본권 약계층·지역집중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문화경제 활동 활성화 ·작은영화관 미디어센터 자치분권 체 미디어 활성화	·문화플랫폼 조성, 농어촌 문화예술 관련 교육시설 개보수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 시행 ·지역 내 유후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문화기본권 도입 ·지역문화정책, 생활예술 활성화

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체계와 문화관련 공약.

가. 나라를 나라답게 - 4대 비전 체계와 12개 공약, 201개 이행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공약은 <4대 비전 체계와 12개 세부 공약 201개의 시행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공약의 구조는 ‘나라를 나라답게(2017년 4월 28일)’³⁾라는 한권의 공약집으로 묶여 있다. 공약집의 구성은 다층위적인 구조를 갖는데 4대 비전 12개 공약체계를 제시하고 예산 대안을 제시하고,

3) <http://theminjoo.kr/autoalbum/page/minjoo/view.html?extweb=true> “나라를 나라답게”

다시 201개 이행과제를 계층별·직업별·성별 등으로 다시 재구조화 하여 이른바 매트릭스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설계의 과정을 요약하자면 2016년 10월,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전부터 대학교수와 전문가와 900명으로 출발한 “썩크탱크-국민성장(위원장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는 정책단위가 공약대안을 설계하여 민주당 후보자 경선 과정을 통과하였고, 2017년 4월 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매듭지어지면서 부터는 경선에 참여한 4명의 후보자들의 공약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골격을 이루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병행하여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30일 까지 국민이 직접 만드는 대통령 제안 공약이라는 통로로 국민제인 공약을 공모하여 이중에서 총 43개의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대통령 공약을 제안 선정 공약에 포함시켰다. 문화관련 공약 중에는 <대성동 비무장 지대 공원화>와 같은 우량한 공약이 국민제인 형식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공약이 4월에 제출되어 이것을 바탕으로 전체 공약이 설계되는 역대 급 공약설계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초유라는 수식어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개시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 문화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문화정책을 이해하는 바탕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이 거의 유일한 정책 비전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선거 운동기간 중에 제시된 공약은 어떤 의미에서 한 정부의 국정철학의 출발 지점인 것만큼은 분명하여 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4대 비전 체계의 4번째 순위인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하위로 ‘지속가능하고 성 평등한 대한민국’과 함께 문화·예술·문화재·체육·관광이 함께 묶여 “약속12-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공약 하위로 8개 세부실천 이행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4월 27일 후보자 문화정책 초청 토론회와의 차이점은 블랙리스트 이행과제가 배경으로 들어가고 9개의 이행과제가 8개의 이행과제로 정리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관련 공약은 글의 뒤에 부기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개 이행과제를 서술하는 배경을 공약집에서 ‘왜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공약 제시의 구체적인 배경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이행과제 설계의 방향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12,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의 8개의 이행과제를 분류하면, 6개가 문화예술 관련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1개가 체육·스포츠 관련 이행과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관광관련 공약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강력한 제도의 도입 보다는 무른 정책구조가 발견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라는 과제에 깊게 천착하고 있는 움직임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나. 이행과제 - 포괄적 범위, 그리고 문화격차 해소, 비 시혜적 정책.

1) 배경 - ‘왜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인가?’

이행과제의 배경을 서술한 “왜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인가?”를 살펴보면 문화 예술인 복지확산을 먼저 열거하고 곧바로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 문제가 거론 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문화와 관련한 당장의 상황을 블랙리스트 사태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것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 블랙타과 광화문예술행동 등 현장예술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지적을 그대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기본전제로 ‘국가가 예술 지원은 확대하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오래된 원칙이 다시 서술되어 있다. 중요한 키워드로 <향유, 참여, 창조>와 함께, 문화적 권리를 국민이 충족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거 하자면 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가 <향유, 창조, 참여> 라는 키워드로 성립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여기서 <팔 길이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것은 참혹한 양차대전 이후에 유럽이 뼈아픈 전쟁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반성의 터전위에서 구축된 예술지원 원칙을 말한다. 존 피크(John Pick)가 <예술행정론>에서 제시한 용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원의 역사에서 확인된 원칙은 여전히 존재한다 할 수 있다. 지원을 방관하겠다는 것 보다는 ‘뺨을 때릴 수 있을 거리’라는 꼭 <팔 길이만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다는 영국 예술위원회 (ACE, Art Council England) 의 지원 원칙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그동안에도 우리나라 지원제도의 중요한 원칙이었으나 적어도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는 사태의 아이러니가 지난 정부가 지원금을 앞세워 문화예술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의도를 갖고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들어내면서 팔 길이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에 파탄의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되돌리겠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서술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로 열거한 원칙은 예술지원의 방향을 예술인복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중심이다. 이것은 작업과 창작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예술작품이 창작되기만 해서는 그 의미가 감소되는 것이니, 시장에서의 유통의 통로를 열겠다는 것으로 예술인복지, 창작환경개선, 시장에서의 유통 세 가지를 모두 문화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함께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서 네 번째로 제시된 여가문화 확대 문제는 2000년 새로운 세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문화 확대 형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정책 환경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 번째 배경이 지역문화 입장에서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계층소외의 문화적 극복의 이행과제로 문화균형발전 문제와 인프라 구축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통합문화 이용권으로 연계하겠다는 방향이 서술되어 있다. 우선 통합문화 이용권 문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수급자에 속하는 소외된 분들을 위해 정부가 공연을 보거나 책을 사보거나 하는 기본적인 문화를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 문화누리 같은 제도로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99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개인당 6만원 수준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는 문화소외와 균형발전에 접근하면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지역소외와 계층소외를 구분하지 않고 혼돈하여 접근하는 한계는 있으나,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이후로 2004년 <예술의 힘>이 제시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 지향>의 지역문화 목표체계에서 지역소외와 계층소외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지역문화 영역에서도 중

요한 항목이며, 공약에서는 정확한 액수의 제시가 없었으나 문체부 장관 청문회에서 10만원 수준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공약의 구체성이 강화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배경은 관광과 관련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도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서울 고궁 동대문시장 제주도로 집중되며 사드배치 사태 이후 나타난 관광불균형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한국관광이 여전히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여 관광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이를 개발하여 어떻게든 외국인 관광객 분산정책을 쓰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8개의 이행과제.

8개 이행과제는 6개의 문화예술관련 과제와 1개의 체육·스포츠관련 과제, 나머지 하나가 관광관련 이행과제이다.

이행과제는 가장먼저 첫 번째로 예술인 문화 복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술인의 경제 사회적 권리 보장의 문제로 요약되는데, 기초예술의 시장실패 즉, 시장경제 중심의 구조 속에서 기초예술 자체가 시장에서 실패함으로 예술의 영속성이 위협 받는 현실을 국가가 개입하여 보정함으로 공동체의 풍요를 관장하는 예술의 가치를 보전하는 정책을 의미할 것이다. 이행과제에 UNESCO가 권고하는 권고정책이라는 점도 이행과제에 명시해 두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저작권 대한 보장이다. 가장 먼저는 고갈되어 가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대책이 기술되어 있다. 기초예술 시장 실패에 따른 공동체의 풍요를 보장하는 필수재인 문화예술의 영속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법률체계를 1972년에 제정하여 이 법률에 따라 1973년부터 현재까지 창작관련 사업에 사업비 일부지원 원칙을 견지하며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02년 영화관 입장료 및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권의 입장료의 7%를 징수하여 조성해 온 문예진흥기금 조성금이 준조세 성격으로 위헌판결을 받아 조성금의 추가조성이 막혔고 2003년부터는 부족한 재원을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충당하면서 일단의 위기를 극복한다. 그러면서 조성 기금을 혈어 쓰는 형태의 대응을 하였고 드디어는 2005년 기준 5,200억을 상회하던 조성 기금을 거의 소진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대로 간다면 2019년 조성금 자체가 완전 소진됨으로 국가차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안정성을 강화하고 당초의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던 당시의 계획대로 매년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행과제의 구성으로 해석된다. 이 이행과제에는 청년예술가의 창작지원을 통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81만개> 공약과 묶여 추진하는 형태도 가능해 보인다.

'13년 말 문예기금 잔액	구분	'14년 말	'15년 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1,140	1,024	1,009	1,015	1,061	1,108
	지출	2,006	1,860	2,000	2,000	2,000	2,000
2,395	수지차	△ 866	△ 836	△ 990	△ 984	△ 939	△ 893
	기금 잔액	1,529	693	△ 297	△ 1,281	△ 2,220	△ 3,113

표5> 한국문예진흥기금 중기 운영 추이 (단위 : 억원)⁴⁾

세 번째 이행과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지난 정부가 입법한 문화기본법과도 연관되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이행과제가 될 것인데, 국가나 나서서 국민의 문화권 즉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하겠다는 이행과제이다. 전 국민적인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행과제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생활문화 시대를 열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도록 기초문화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권 누릴 권리를 보장하거나, 동네 생활문화 환경을 만들고 생활문화 동아리를 크게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이 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 계층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정책이 반영되어있고 <핀란드 아난탈로> 형태의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기관의 전국적 확대와 같은 것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시설 중에서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국민의 문화생활에 기여도가 높은 공공도서관의 같은 것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다만 도서관확충과 같은 공약의 이행과제는 정확한 목표체계가 구체적으로 서술 될 때 때 공약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현재 제시된 이행과제는 분명한 목표치의 제시가 없으므로 향후 실행과제를 만들 때 목표치의 설정과 같은 것이 반드시 동반되기를 희망한다. 이상과 같이 3개의 이행과제는 크게 보아 예술과 깊이 관련된 실천적인 이행과제로 분류할 수 있겠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문화산업과 관련한 과제이다.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만들고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가 문화재, 문화유산과 관련한 이행과제로 문화유산 가치 확산과 관련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던 숙원 사업들과 문화재 전 영역의 과제들이 들어가 있는 형편에 있다. 그러면서도 다소 생소한 2019년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여기에 부기되어 있기도 하다.

여섯 번째가 지역문화 관련 이행과제이다.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행과제인 점도 분명하며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이행과제이다. 이 과제의 중요한 골격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확대하겠다는 실질적인 대안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공약 이행과제 지시 방법에는 명확한 액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참여정부 이후로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지역문화진흥기금은 광역자치단체 당 50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법적구성 지위를 얻은 각 지역의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자율성과 기관운영독

4) 2016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립성을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겠다는 것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 재생사업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설계한 문화도시 사업의 실질적 강화문제도 적시 되어 있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현재 국토부 영역과 문화부 영역이 뒤섞여 혼재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영역 안에서 문화도시 업무를 적어도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이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굳이 분류하자면 여기까지 총 여섯 개의 이행과제가 문화예술, 지역문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과제이며 여섯 번째 과제가 지역문화와 관련한 이행과제이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가 체육 스포츠 관련 이행과제로 스포츠 복지국가 터전에 여가문화 확산 등이 여기에 거론되어 있으며 여덟 번째가 승표가 있는 관광복지사회 실현, 관광 정책과 관련한 공약으로 이것은 큰 틀로 여행이 있는 삶과 관광복지 사회를 연다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고, <체크 바캉스>와 같은 용어로 구체화 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선거운동 기간에 제시된 공약만 가지고 일하는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보면 공약이란 당선 이후 후보자가 방점을 찍어 제시된 중점과제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나, 공약구성의 기본 배경은 당선을 목표로 두는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구성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공약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전체얼개를 가름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하고자 한다.

3) 정책결정의 중심 -협치 관점.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관련 공약은 문화·예술·문화재·체육·관광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고 이번 대선의 타 후보자와 비교하여 우량한 지점은 있다. 공약이 실질적이고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앵데미땅> <아난탈로> <체크바캉스>와 같은 해외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 공약이 구체화 과정을 겪은 형태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국정과제로 숙성되는 과정을 거쳐 왔는데 이 점이 생략되어 전체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보는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지점은 우선은 안팎으로 형성된 초라한 위축을 경험한 문화행정, 문화정책 영역이 어떻게 첫돌을 놓을 것인가에 착안해야 한다. 현장과 관료, 민간과 정부가 넥타이를 풀고 비 관료 전문인 원탁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쩌면 그보다 앞서 다양한 문화를 구성하는 현장단위들이 다양한 날 것 같은 그것이 비록 세련된 용어로 가공되지 않을지라도 정책에 개입하고 제도를 요청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우선은 시혜적 입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결정은 역시 중요할 것이나 어떤 한 국가의 또는 한 체제의 발전 동력을 조직한다는 면에서 문화정책을 결정하는 보다 큰 단위의 정책적인 제안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 블랙리스트를 보는 관점은 대개 헌법정신이 가볍게 무시되는 현실과 사회적 배제가 바탕이 되는 권리제한 문제가 있을 것이나 그 중심에는 전근대 전제주의 왕정에서나 가능한 일이 별반 큰 관료사회의 저항도 없이 2년이

넘도록 제도로서 작동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아픈 역사를 겪은 지금은 어떻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한 단계 진전된 정책을 합의해 낼 것인가에 중심이 있다.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혼자주도하는 정책이 아닌 현장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 방법론은 반드시 꼭 필요하며, 이런 면에서 도종환 장관에 대한 자질과 능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장관으로 매우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크다. 그분의 시인됨을 굳게 믿는다.

3. 국정농단 촛불정국, 현장예술계의 19대 대통령선거 문화예술정책 대응.

가. 촛불과 국정농단 그리고 현장문화예술.

주지하였다시피 19대통령 선거는 국정농단에 따른 전 국민적 저항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되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진 선거이다. 국정농단의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제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은 헌법유린 사건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고를 몇 몇 개인의 판단에 의해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본질이 있다. 구속된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온 것은 2013년 8월로 이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네 가지 사안에 서명한 문화예술인들을 일종의 리스트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전투적으로’, ‘박멸’ 될 때까지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동원 했다는 의혹을 받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즉, 세월호 시국선언, 시행령개정 또는 폐기 촉구 서명, 지난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자, 6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 지지선언자 등의 네 가지 사유의 총 9,743명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각종 지원 심의 등에서 배제해 왔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다. 여기에 따라 2017년 1월 21일 특검에 의해 김기춘과 현직 장관이었던 조윤선이 구속되고 뒤이어 전직 장관 김종덕 등이 구속된 일련의 사태를 의미한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연극협회의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연극인 1,000명이 별도로 박원순 시장의지지 선언을 조직함으로 서울지역의 많은 연극인들이 다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며 강조되어 있다.

각인된 현장예술계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각 지역별로 20여차례에 이르는 촛불집회를 분산하여 견인하였으며 전국단위의 예술동력의 결집은 4개월 이상을 광화문 광장에 블랙텐트를 치고 노숙투쟁을 이어가면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광화문 예술행동)>, 광화문 미술행동,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들의(블랙타파), 블랙텐트 극장운영, 빈궁미술관 운영 등 규모를 갖춘 활동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독립예술가들이 대규모 동력을 제공하였다. 실제 광화문 예술행동에 참가한 단체만 해도 그 숫자는 100여개 단체에 이르며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이끌어 이번 조기 대선의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일관되게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후로 현장과의 강력한 협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위한 일관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나. 현장 예술계의 대응과 요구지점, 성과.

지난 4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4월 9일, 4월 27일 두 차례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월 3일 토론회가 집담회에 가까웠다면, 4월 27일 토론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한 후보자들의 문화관

런 정책 총괄 기획자들을 직접 불러 정책간의 특성을 비교하고 정책의 차이를 규정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다수의 후보자 진영이 참가하여 새 문화정책의 갈 길을 정하는 토론회를 전개하고 뒤 이어 5월 4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한 각 후보자를 대리한 정책 총괄 책임자와 단체들 간에 공적 협약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약의 위상을 갖추었다. 4월 9일 토론회에서 제안공약을 마련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우리는 문화대통령을 원한다.>는 제안 공약을 17개 단체가 먼저 만들고 이것을 당시 후보자였던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와 각각 협약을 하는 형태가 동원되는 방식을 응용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참여정부 당시 이룩한 문예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교육강화, 복권기금 전입을 통한 예술재원의 안정적인 마련, 기초예술진흥체계를 통한 예술진흥 등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창의 한국>과 <예술의 힘>이라는 탁월한 정책 비전서가 2004년 5월에 만들어 질 수 있었던 밑그림으로 작용한바 있다. 면, 이번 19대 대선의 민간의 전략은 높아진 형장의 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현장 예술계와 관료가 함께 <비관료 전문인 원탁>을 차리고 거기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원칙에 동의를 요구하는 단일안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창의한국>과 <예술의 힘> 역시 지난 두 번의 정부를 지내면서 각종 구호로 함부로 사용되어 졌으며, 심지어는 지난 정부는 밖으로는 <창의한국>의 목표를 세우고 안으로는 가장 창의적이지 않은 정책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창의한국>은 이미 충분히 오염되어 있으며 단순히 <창의한국>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임도 분명하다. 단순한 회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니와 단순한 회기가 필요한 시점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어떤 결론이라도 단순한 회기는 방법이 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차기 정부 국가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공동 협약서

국가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요구하는 문화예술단체는 국가문화정책의 새로운 혁신과 비전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호 협약을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검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문화정책을 바로 세우고, 문화예술인들이 검열 없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둘째, 국가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치가 이루질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국가문화정책의 실천과제 논의와 정책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2017. 5. 4.

가극단 미래, 강원민예총, 경남민예총, 게임인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광주민예총,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전남작가회의,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극단 신세계,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뜨거운청춘,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산업 사드피해 공동대책회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모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독립PD협회,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부산민예총, 부산영화협동조합,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서울민예총,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세종민예총, 아시아1인극협회, 어린이책작가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짱, 예술NGO-자유공공실천, 울산민예총, 인천민예총, 일상예술창작센터, 자바르페,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전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제주민예총,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충북민예총,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요구한다!>

① 기본 전제

-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을 위한 출발점으로 문화사회를 향한 적폐 청산과 사회 혁신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재벌 독점 및 부패 척결, 사드 철회 외

②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함

■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재 문화행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수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 구성하여 문화행정 전면 재검토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비전 수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운영

■ 협치와 지역화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확립

-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행정의 철학과 원리로서 협치(거버넌스)와 지역화 정책을 확립
-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에 걸쳐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추천 및 협의 등 적극적인 협치 과정 보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 수립

- 위의 두 가지 원칙 속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 및 대안 마련 추진
-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수준을 넘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확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 마련

이를 토대로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에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현장 문화예술인 문화정책 원탁회의> 등 추진

- 문화정책, 문화행정과 관련하여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권한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공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

공개포럼 현장에서 문화예술 단체들에 제안된 주요 내용들

■ 문화산업정책의 혁신 필요

- 문화콘텐츠 산업내의 장르별, 산업별 특성 등이 존중된 정책/제도 마련
- 문화산업정책을 비롯하여 정책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보호법 및 중독 이데올로기 등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지위에 대한 제고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상화 및 활성화

- 학교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람료 면제 등 지원 필요
- 도서관 확대 조성 및 문화예술 전문 도서관 건립
-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문화예술교육의 최상위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서 문화적, 교육적 창의성 구현 등으로 재설정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대책 마련
- 예술대학의 지역적 배치 필요
- 학교 교육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비롯하여 성장, 경쟁 중심의 정책 철학과 목표를 문화적 가치 확장 중심으로 전환
- 음악인들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 :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불공정계약 등 개선
- 혁신적인 디지털/온라인 음원 관리 체계 구축 : 음원신탁제도 개혁, 합리적인 음원가격 결정, 음원수익 과제 표준안 개선, 저작권격권 재검토 등
- 음악공연장 운영 혁신 : 공급형 시설 조성 및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음악 생태계와 창작 활동 그리고 혁신적인 운영모델 수립을 고려한 정책 마련
- 음악을 둘러싼 예술교육제도, 직업교육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중장기적 대안 마련

■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 운용

- 문화예술을 둘러싼 토대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필요
- 다음 정부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문화예술생태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함
- 문화예술계 현장과 공공기관의 관계 정상화
- 문화부를 비롯하여 문화행정 정상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및 프로세스 필요
-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 참여 중심의 쉐크탱크 구축
- 정책 제안을 넘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역량 강화 및 협치 체계의 구축이 우선돼야 함

■ 문화행정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혁신 체계 필요

- 문화정책 내부의 독립성이 아닌 국가 행정(청와대, 기재부 등)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문화행정 환경 조성
- 경제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 공공기관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 이를 위해 문화예술공공기관 특별법 등 제도 개선 필요
- 예술가들의 자기 결정권, 현장의 구체성 등에 기반한 문화정책/문화행정 수립 및 운용 체계 확립
- 행정 주도의 문화정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정책 비판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력하기 위한 공론장(공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

■ 지원정책 및 제도의 전면적인 혁신 추진

- 지속가능한 삶과 창작이 연결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환경 구축
-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수립
- 합리적인 기회 제공, 독립적인 문화예술인, 전문적인 시설과 기관 운영 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 의식주 등 문화예술인의 생활 환경, 사회적 중 다양성 등을 고려한 지원 정책

- 지원행정 절차의 효율성, 투명성, 개방성 등 혁신
 - 지원기관들의 현장 전문성, 소통과 협력 능력 강화 : 지원사업의 용역업체 위탁 문제 등 개선 필요
 - 선별적이고 자기증명을 강요하는 현행 지원제도 개혁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 책임자 처벌, 본질적인 대안 마련
-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민간 전문가 참여 등
 -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 기타
- 무용 전문공연장 건립
 - 무형문화제 법안 및 전수제도 개선

표7> 주요 문화예술단체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화정책 협약서와 현장 예술인의 정책과제⁵⁾

4. 새 정부 지역문화 정책의 쟁점과제 도출.

지역중심의 문화정책의 과제는 국가단위 행정과 지역에서의 실천적 의제의 결합으로 가능할 것이나, 현재는 문제인 정부의 문화행정을 총괄할 도종환 장관에게 거는 기대에 모든 의제가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곧바로 과도한 기대로 이어질 확률도 있다. 프랑스 드골 연립정부의 앙드레 말로 장관을 능가하는, 또년 1980년대 68혁명 이후 세대로 미테랑 정부의 <자크 랑>과 같은 예술인 장관의 출현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청산해야 할 과거와 나아가야 하는 미래 사이에 놓인 과도기에 있다. 정부구조의 경우에도 미완성 상태에 있고 2017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현행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알려 있을 뿐이다. 지난 정부에서 권력 남용을 통해 적폐를 양산한 청와대 비서실 조직체계를 손보아 교문수석실을 축소하는 문제는 그동안 당·정·청을 매개하는 역할이 문화예술 정책의 전권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겨가는 구조에 있다고 보인다. 이것으로 그동안의 단·점점을 보완하여 문화예술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지역문화의 대안 체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역문화 전체가 필요로 하여 중앙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 중심으로 접근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계 현장의 합의에서 의제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나 새 정부의 문화정책의 중심 기조가 어

5) 협약서는 5월 4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협약함으로 공약으로서의 지위를 얻었으며, 현장예술인들의 주요 정책제안은 “(가칭)현장예술인 문화정책 원탁회의(2017. 4. 9)”에 참여한 81개 단체의 대표자들의 논의를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이 요약 정리하여, 2017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17. 4. 27, 가극단 미래 외 81개 단체)에 수록함.

는 정도 완성되는 시기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얼마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형편에 있다.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어떻게 첫 돌을 놓을 것인가를 그리는 로드맵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지 않은가?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향점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패러다임	-문화를 순수가치로 존중 -전통의 창조적 활용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확대	-문화의 공공산업적 가치 확산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지역 중시, 민간 자율성 강조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창작기반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사회 구현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복지 구현
문화예술 지원	-자율 참여 분권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예술가 직접지원이 아닌 공연장, 연습장 등에 간접지원 -선택과 집중, 경쟁을 통한 사후 차등 지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지원 강 화 -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화격차 해소
주요과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진입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재정 2% 실현, 예술인 복지법 강화 -지역문화,문화나눔 활동 강화를 통 한 문화격차 해소 -행복한 생활 문화 공간 조성 -문화유산보전, 생활스포츠 활성화
주요 이념	-‘창의한국’ ‘새예술정책’ 등을 통해 문화예술과 문화공공성 강조 -‘C-KOREA 2010’을 통한 문화산 업산업발전과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구축	-‘소프트파워’ 개념을 통한 콘텐츠 산업, 관광, 체육분야 산업 경쟁 력 제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구조 창출 -정부와 민간, 자치단체의 ‘실용적 역할 분담’	-창조경제 하위의 창조사회에 복무함 (18대대통령 선거공약과 인수위의 국 정과제 140을 통해 구체화)

표9> 역대 정부 문화정책 비교⁶⁾

지금은 중앙정부의 정책 형성을 마냥 기다릴 때가 아니며 지역문화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중요한 의제들을 생산해 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번 지역문화네트워크의 학술회의가 다양한 지역문화의 실질적인 의제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논의의 출발지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가. 서울이 지역을 만나는 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문화영역으로 한정할 필요 없이 지역에서 공히 발생하는 문제는 문화관련 예산의 크기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방정부 예산의 사이즈의 협소함에 문화 분야의 예산 후순위가 겹쳐 빈곤으로 결과가 나타난데 이것은 지역이 가난한데 원인이 있기 보다는 현재 세금을 나눠 쓰는 방식에 원인이

6) 지역문화예술의 전망과 지역문화의 중 단기 전망 재구성 (박종관 2013년 3월, 부산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있다는 지적이 행정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금처럼 중앙대 지방이 8:2의 예산배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에는 재정 부족을 넘어서는 재정 빈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 분권 협치를 통치이념으로 세운 지역균형발전의 국정철학을 가진 정권이다. 멀게는 문민정부 시절부터 혹은 참여정부 이후로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예산 배분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전 지역 차원에서 대응하여 7:3 수준, 6:4를 넘어서는 예산 배분 방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것은 문화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 지방정치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통으로 논의되고 대응하여, 헌법을 바꾸는 개헌이라는 결정적인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다.

나. 지난 정부 3명의 장관 중 2명이 구속되었고 2명의 차관이 구속되었다. 문화행정이 받아야 할 부담과 위축은 이것으로도 충분히 설명 될 수 있다. 문화행정의 위축은 곧바로 문화의 위축이다. 민간이 충분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 못하고 더불어 대부분의 제도와 예산을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역문화의 현실 환경, 블랙리스트로부터 받은 피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 놓은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숙제로 삼아 풀어내 한다. 행정이 감당해야 할 지점이 있을 것이나, 동시에 현장이 감당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 문제를 부는 것에는 사회적 배제 문제로도 후속조치인 제도개선만으로도 부족하다.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백서작성, 제도개선의 시나리오는 이미 민간이 실행중인 전례들이 있고 이것이 행정과 당장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조차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한 제도 마련은 필연적이다. 지역문화진흥법(2015년 12월 30일)은 그자체로 의미와 가치는 크지만 그럼에도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지역문화를 부양할 세 가지 요소가 되는 시설·재원·인력 모두에서 제대로 된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척박한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지역문화진흥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지역문화의 해>가 개최 되었던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장 14년이나 기다려 제정된 법률은 막상 법상을 받아보니 돈도 공간도 사람도 없는 지역문화를 부양하는 실질적인 장치라고는 일 년에 5억 내외의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 사업>과 그냥 내버려 두어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6기에 이르는 현실에서 요즈음은 안하는 광역지역이 단 한지역도 없다시피 한 <지역문화 다년간 종합 발전계획>의 국가의 정책개입 정도로 요약되는 선언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응과 대안 마련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4가지 절대요소인 시설·재원·인력·전문기구의 종합적인 대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강화 되어야 한다.

라. 지역문화재단의 자율권 강화는 실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역문화재단의 자율권 강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들어내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니 정책의 목표지점을 분명히 세우고 실행 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있고 더구나 대부분의 재단은 전문성에서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도 지역 간에 편차가 나타나 재단 사이에 편차가 더욱 벌어지는 형편에 있다. 우선은 예산과 인력이 넉넉한 수도권

재단과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주요한 지향지점이 될 것이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마이너리티 하게 제시하여 잘하는 재단에 더욱 지원금을 몰아주는 형식으로는 접근하여서는 격차가 줄기는커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형편에 있다. 지역문화재단 자율권 강화 문제는 정책 실현단계에서 열악한 지역을 우선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획기적인 전책의 전환도 요구된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의 일차적 협업 대상은 지방정부이며 지역의 예술인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 할 수 있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도 예상되는바, 전 지역문화 재단 차원에서 공동의 대응과 고갈을 향해가는 중앙문예진흥기금의 지역 협력형 사업에 깊게 의존하는 현재 방식의 사업비 운영 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전략적 대응만이 바른 대응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독임제 구조의 지역문화재단이 합의제 구조의 지역예술위원회 구조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마. 문재인 정부의 지역문화관련 최고의 과제는 결국 지역문화진흥기금과 지역문화 체계에 있다. 당장은 문예진흥기금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구체화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생활문화진흥원과 각 광역문화재단 그리고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을 잇는 협업체계의 구축과 대안에 대해 필요한 일들을 찾아야 한다. 전 프랑스를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프랑스 미테랑 정부 시절의 지역문화사무소와 체계에서도 빌어 와야 할 것이 있어 보인다. 어떻게 각기 특화된 지역문화를 만들고 자율권을 확대하고 의견 개진의 통로를 여는가 있을 것이며, 예산과 권한을 어떻게 최대화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설립이후 2008년 1기를 마치고 난 지난 9년 동안 적지 않은 부침이 있어 왔다. 지금은 서울 동숭동에서 나주 혁신단지로 이전해 있고, 그동안 두 번의 정부를 지나면서 자율권은 약해지고 대부분의 사업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형태를 동반하면서 안으로는 기관의 존재이유인 문예진흥기금의 고갈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의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현장예술계와의 불신은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떻게 고사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의 단초를 마련할 것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상화의 문제는 출발지점은 1기 위원회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어떤 한계를 겪어야 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 반성하는 일부부터 시작하였으면 한다. 위원회 1기 활동은 그럼에도 성과와 가능성을 남긴 소위원회의 활동에 있다. 그리고 그동안 두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무엇을 잃고 어떻게 자율권의 손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기금 고갈은 또 어찌해야 할 것인가?

사. 지역문화에는 다양한 문화관련 의제가 있다. 지역축제 지역관광과 같은 대외적인 경쟁력이 허약해지면서 고령화 현상을 겪는 지역예술계를 부양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 그럼에도 지역문화의 역동성을 담보할 의제를 생산하고 대안을 정책으로 설계하는 힘은 여전히 부족하다. 새로운 의제의 개발은 필요하며 지역문화 정책전문성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은 왜 스스로 의제를 만들

어 내지 못하는가? 다양한 방위에서 대안으로 도출이 되어야 하며, 그 중심은 문화사회와 같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 방위적인 노력이 경주 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균형발전을 중심에 놓고 지역문화의 각종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화 하는 것에 있겠으나, 세세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이 발제문이 갖는 큰 한계이다.

아. 현재는 소외극복 차원의 문화균형 발전을 근간에 놓고 지역문화의 소외극복에 대해 생활문화와 계층소외 부분이 다소 뒤섞여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정책단위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는 예술생태계의 복원에 본질이 있다. 그리고 계층소외와 지리적 지역소외의 문제가 다소 혼돈스럽게 대안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수도권이 갖는 문화부재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대안을 낼 필요는 있다. 오랫동안 지역문화를 지탱해 온 지리적 소외문제, 한시대 한국가의 문화는 당대 다양하게 꽃피운 지역문화의 총합일 뿐이라는 지역문화 개념, 그리고 공동체의 풍요를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 차원의 지역문화 논리와 같은 오래 된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지향지점을 함께 만들어 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5. 나오며.

현재는 소외극복 차원의 문화균형 발전을 근간에 놓고 지역문화의 소외극복에 대해 생활문화와 계층소외 부분이 다소 뒤섞여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의 대안을 논의하는 곳에서는 최종 대안을 생활문화 활성화 범위로 이해하는 경우는 늘 발생하는 일기도 하였다. 본질에는 계층소외와 지리적 지역소외의 문제를 다소 혼돈스럽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빈번 하였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비수도권이 갖는 문화부재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대안을 낼 필요는 있다. 오랫동안 지역문화를 지탱해 온 지리적 소외문제, 한시대 한국가의 문화는 당대 다양하게 꽃피운 지역문화의 총합일 뿐이라는 지역문화 개념, 그리고 공동체의 풍요를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 차원의 지역문화 논리와 같은 오래 된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지향지점을 함께 만들어 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창의한국>은 ‘창의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기술함’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그 이전까지의 문화정책은 한 정부가 들어서면 대체 어떻게 문화와 관련한 예산을 어디서부터 집중하여 나눠 쓸 것인가를 그럴듯하게 어려운 용어로 포장하여 문화정책이라고 제시하던 것에 비교해, 한 정부 한 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화의 백년대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 때문에 그 이후 나타나는 정부의 문화정책의 각종 진원지 같은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게 되기도 하였다. <창의한국>이 가진 의미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 잘 작용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지난 정부의 문화정책이었다. 문화융성, 창조경제, 문화예산 2%로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문화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의 문화정책에 비해서도 우수하였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여 행정과 문화현장은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다. 구호나 목표는 결코 정책이 아니었다.

이미 어떤 우리나라 시인은 1960년대 “황토 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꿈무늬에 막걸리 병을 싣고 삼십 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는 세월을 갈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도 <앙드레 말로>처럼 <자크 랑>처럼 시 쓰는 장관의 출연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흡수저 출신 도종환은 장관 취임 전 자신의 처지를 깊은 숲속에 살다가 그저 '길가에 불려나온 가로수 처지'라고 설명하였다. 저 뒤편길에 버려져 형편없이 녹슬어도 곳곳에 문화가 살아 숨 쉬어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지역문화의 낡은 구호를 다시 꺼내고 다듬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여기'이다. 지역에 산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류 국민이 되지 않는 나라, 변방은 곧 중심이었음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⁷⁾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배경

약속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왜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인가?

- 1) 국민 누구나 창조성의 원칙으로써 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지행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여낼 것입니다.

7) ‘나라를 나라답게’ 6P~7P, 295P~206P, 366P~267P, 378P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윤호중 김용익 2017. 4. 28)

- 2)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블랙리스트’를 척결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를 충족되도록 할 것입니다.
- 3) 열악한 상황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단기적 지원 사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과 작품발표공간은 확보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여 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 4) 국민건강 증진을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운동 참여 비율과 생활체육 참여를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휴가를 기본적 권리로 확립하여 국민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 5)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문화 인프라와 통합문화 이용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 6) 방한 외해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정책인 인프라 구축 및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의 분산 정책을 적극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 콘텐츠,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문화 · 예술 · 체육



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5.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ی겠습니다.
6.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8. 심포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 · 예술 · 체육

예술인의 문화 복지 사각지대를 1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 ◆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반영
-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 ◆ 표준계약서 의무화
 - ◆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 ◆ '임금채권보호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실시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옹페르미땅) 도입추진
-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 ◆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문화 · 예술 · 체육

예술인의 창작권을 2 보장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자원 확보

■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일자리확충

- 지역 유휴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 지원
-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 민간 비영리 예술공간 지원

문화 · 예술 · 체육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3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문화 · 체육 · 관광 통합이용권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 문화 · 체육 · 관광 지출비의 조세 감면 제도 도입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
-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핀란드 아난탈로)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교육 강화
- 지역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 50+ 세대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가칭) 운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

-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메이키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 동네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 유희공간 활용 다양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마을극장 등)
- 실버극장 확충,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연습·발표 공간과 예술강사 지원

■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장서구입확대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

■ 지역서점및스토리텔러양성등출판문화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

■ 국내 출판 작품들의 해외 보급 사업의 확대

문화 · 예술 · 체육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를 4 만들겠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중소문화콘텐츠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출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도 확대
- 콘텐츠 공제조합의 안정적 자원 확대

■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 환경구축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담합 등 금지
- 문화콘텐츠 제작표준계약서 확대

■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구축

■ 4차산업 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 예술과학기술 융합플랫폼 확대 및 기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지원

문화 · 예술 · 체육

5 공공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매장문화재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 고도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영제도입
- 개인, 중소기업체등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확대

■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 문화재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
- 문화재재난안전 관리 기반 강화
- 문화재일상관리 강화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

- 시도 등록문화재지정제도 도입
- 근 · 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 재생사업지원
- 3 · 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유산 등록문화재지정 및 기념사업추진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문화 · 예술 · 체육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6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우선 지원

■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선택적 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출연

■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보장

■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 폐산업시설, 원도심 노후건물, 지하도 · 지하상가 등 활용 지역문화재생 사업지원
- 민간주도 유희공간 리모델링 사업의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 문화도시 지정 및 집중 지원,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문화 · 예술 · 체육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7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 스포츠'로 전환

-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
- 초등학교 생존 수영의무화 추진
-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도입
-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공공기관 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 확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 ◉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 강화
- ◉ 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

- ◉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양성
- ◉ 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장 및 학사관리 강화, 최저학력이수
- ◉ 선수생애관리제 도입
- ◉ 학교체육진흥회 설치, 학생체육대회 분리 개최
- ◉ 전문체육 · 생활체육 · 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체육인 복지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 ◉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 ◉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스포츠산업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스포츠기업 확인제 도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 ◉ 은퇴선수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문화 · 예술 · 체육

쉽표가 있는 삶,
8 관광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시행)
- ◉관광지, 호텔, 관광버스에 인센티브 부여 등 무장애(장벽 없는) 관광환경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강화

-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외국어 안내체계, 교통편 제고 등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입확대
-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플랫폼 운영

 관광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육성
-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육성
-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육성
- ◉지역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영향평가제도, 국민관광 신탁제 도입

<국민제안 공약 선정작 (가작) 비무장지대 대성리마을 관광지화 공약>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관광화

가작

주요내용

- 분단국가의 상징인 대성동 마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관광 뿐 아니라 국가안보관 확립
- 북과의 관계 개선 역할

기대효과

- 평화, 안보관에 대한 국민 교육 가능
- 국가 관리를 통한 관광 마을 조성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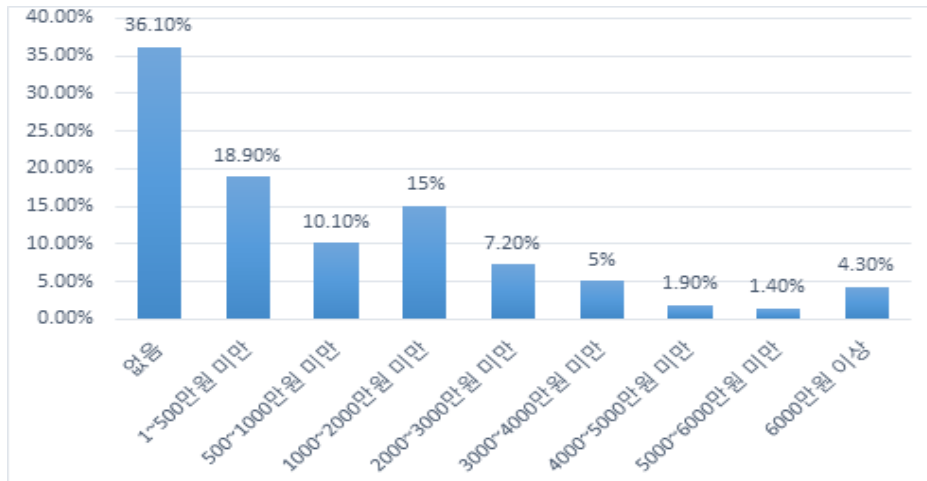


<계층별 공약 17- 예술인>

‘블랙리스트’ 청산하고 예술인 처우 개선하겠습니다!

광범위한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생산적 복지활동의 지원으로
문화예술 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예술인 예술활동 수입 비중



편견·차별 없는 지원확대가
문화예술의 꽃을 피웁니다

17

문화예술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청산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강화

- 표준계약서의 무화
-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 창작권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체불 수입보장 제도 실시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프랑스 옹페르미땅) 도입 추진

예술인복지금고지원

-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 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일자리 확충

○지역 유희 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지원

 문예창작인 지원확대

-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
-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국내 출판 작품의 해외 보급사업 확대

발 제 2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

김기봉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상임이사)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

김기봉 /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상임이사

1.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

○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시대”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

새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 갈 시대정신은 ‘정의’

따라서 ‘정의’는 핵심가치이자 비전이기도 하며 국정철학이기도 함

새 정부는 촛불민심이 수립한 정권임. 촛불민심의 요구는 ‘적폐청산’과 ‘민생해결’임.

적폐청산은 시스템, 제도, 관행 개혁을 요구함. 정경유착, 정부불신, 갑질논란 등 모든 것이 대상임. 그리고 영역도 권력구조(국정원, 국방, 검찰, 경찰 등)의 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일상의 잘못된 관행까지 포괄하는 것임. 다만 순서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지형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의 변화는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임

○정의로운 나라가 지향하는 국정방향은 ‘국민통합의 시대’임

진정한 통합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당장의 개혁과제를 미루고 봉합하는 일시적 통합은 국민통합이라 할 수 없음. 적폐가 청소된 깨끗한 바탕 위에서 내일을 위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정의로운 나라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새 시대가 ‘국민통합의 시대’임. 이는 새 정부의 핵심 비전임

2. 5대 핵심가치¹⁾

새로운 정부가 개인, 국가, 인류공동체를 향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자율, 책임, 공정, 포용, 평화의 가치임. 이는 모든 국정과제에 적용되어야 할 가치임

1) 자율의 가치는 통제와 강압을 배제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회임. 이를 문화 분야에 적용하면 블랙리스트 진실 규명과 처벌, 문화계(예술, 체육, 관광, 산업 등)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국정원리이기도 함. 분권자치와 팔길이원칙은 자율의 가치를 반영하는 추진 방침이 되어야 함

2) 책임의 가치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국민이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행사한다는 국민주권, 국민동행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것임. 인권과 자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유능한 정부를 지향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뜻임

3) 공정의 가치는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책의지이며, 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 등 3불을 혁파하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지향하겠다는 것임.

1) 민주당 선대본 국민의나라위원회, 민주연구원,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방향-신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 2017.5.17. 5대 핵심가치와 5대 국정목표는 위의 문건에서 발췌

4) 포용의 가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보복, 국민 편 가르기, 분열과 배제의 나쁜 정치와 정책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임. 아우렐리우스의 말대로 “가장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를 벗어나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고, 비판과 반대의견에도 충분히 귀기울이는 포용적 리더십과 탕평책을 통한 유능한 인사 등용으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임

5) 평화의 가치는 최고의 안보가 평화라는 것이며, 또한 평화가 경제이며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뜻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압도적인 국방력 우위에 바탕을 둔 평화유지와 비핵화 해결이 평화로 가는 길임. 이를 위해서는 대결과 대화의 두 트랙을 동시에 하면서 공생공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함.

3. 5대 국정목표

1) 더 많은 민주주의

○ 국민주권정부

- 정치인들의 정부, 기득권층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인 정부
- 선거만이 아니라 일상 속의 국민 참여

○ 광화문대통령

-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대통령. 구중궁궐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

2) 더 좋은 시장경제

○ 사람중심 경제

- 일자리 중심 경제, 민생 중심 경제
- 노동이 존중되는 경제

○ 공정한 경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 고객과 판매자가 공생하는 경제

○ 혁신 경제

- 창의적 아이디어가 존중되는 경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

3) 차별 없는 공동체

○ 포용적인 복지국가

- 출산기피로 사라지는 한민족! 생활과 육아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 질 높은 사회통합

- 자신의 노력 이외에는 어떤 특권과 차별도 없는 사회
- 노동과 성평등이 존중받는 사회
-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 더 안전한 사회

- 서로 건강과 안전을 보살피는 더 나은 공동체

4) 활기찬 분권발전

○ 지역 주권의 시대

- 중앙집권의식 탈피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
- 촘촘한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 실현
-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 균형발전의 시대
 - 전 지역이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각자 설정한 최선의 경로를 따라 발전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대
 - 지역 특색에 맞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지역 불균형의 과감한 시정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적극적 시행
- 5) 당당한 국제협력
 - 책임안보 실현
 - 북핵, 사드, 중국발 위기 등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외교와 안보는 우리가 책임지는 책임안보 실현
 - 주도적인 북핵 외교
 - 유연한 남북관계 구축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실용적인 접근
 - 안보태세 강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경제통합
 - 8천만 단일시장 구축과 북방경제의 확대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북한의 변화 유도
 - 동북아 전체가 공동 번영하는 경제협력 실현
 - 국제사회와의 협력
 -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초 위에 긴밀한 한중협력 실현
 - 과거의 진술한 반성 위에 상호 존중하는 한일관계 실현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동북아 이해관계국들과의 협력 구조 구축
 - 보편적 인류애의 발현과 지구적 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선린 우호 협력 관계 구축

■ 국정비전, 핵심가치, 국정목표, 20대 국정과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5대 (국정)목표, 20대 (추진)전략, 100대 (국정)과제 선정 논의
- 고용·복지·성장의 삼각 트라이앵글의 새정부 철학을 각 부처 정책에 반영

국정비전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시대				
핵심가치	자유, 책임, 공정, 포용, 평화				
국정목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시장경제	차별없는 공동체	활기찬 분권발전	당당한 국제협력
	국민주권정부 광화문대통령	공정과 혁신의 사람중심경제	공존과 포용의 대통합	자치분권 균형발전	책임안보 한반도 평화
주요 국정 과제	. 권 력 기 관 개 혁 . 투명한 정부 구현 . 정 치 개 혁/협 치	. 일자리 정부 . 신성장동력 확 충 . 경제민주화 실 천 . 과학기술 부흥 . 농어업 소득기 반 구축과 환 경개선	. 저출산고령화 대응 . 복지기본권 보 장 . 노동존중사회 실현 . 재난안전 강화 . 교육개혁 . 인권/성평등 보 장 . 문화체육 활성 화	. 분권/균형발 전 . 도시재생 . 환경 개선	. 책임국방 실 현 . 한반도 비핵 화와 남북관 계 발전

4.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²⁾

1) 기 조

- ❖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며,
- ❖ 문화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며,
- ❖ 문화는 공동체와 이웃을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 ❖ 문화는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며,
- ❖ 문화는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 ❖ 그러므로 문화는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들은 이어받고, 새로운 변화의 요청들은 슬기롭게 수용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무언의 약속이다.

■ 비 전: “문화의 힘’으로 모두가 아름답고 넉넉하며 행복한 나라”

Art & Culture Democracy Korea, Happy People!

문화민주주의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세상

□ 문화의 힘이란

-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백범 김구)
- ‘문화의 힘’은 자기표현과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으며,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차이와 다양성에 소통하고 공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가치
- ‘문화의 힘’은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이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발전의 동력

2)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은 민주연구원의 BQ(Big Question) 정책시리즈 중 ‘문화정책방향’의 내용 중 일부임.

● 목 표

□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생하는 문화, ‘문화민국’ 실현

○ ‘문화민국’이란

- 문화민주주의의 사회적 가치(Value)
- 한류의 대중문화와 촛불의 광장문화(Image)
- 역동적인 국민(People)
- 매력적인 대한민국(Attraction)

- 문화의 다양성 존중하고,
- 문화사회 구현하여,
- 문화외교로 평화 실천하는, 대한민국!

○ 문화의 다양성 존중 :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양심과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환경 보장 속에서,
-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 존중과 분리·배제가 아닌 통합의 가치로,
- 생명력이 넘치는 다양한 지역문화와 역동성이 흐르는 문화로,

○ 문화사회 구현 : 더불어 행복한 문화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예술가들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 사람마다 문화적 삶을 누리며,
- 마을마다 문화로 이웃이 되며,
- 문화주권자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 문화외교 강화 :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12대 경제 규모에 걸맞는 문화적 리더십으로,
- 5천 년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적 전통에 빛나는,
- 한류의 대중문화와 촛불의 광장문화로,

2) 제안배경

❖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예술인들을 편 가르고, 비선실세·국정농단 등으로 나라 망신시킨 것을, 촛불시민들은 문화와 예술로 광장을 축제로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부정한 권력을 탄핵시킨 위대한 대한국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 문화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문화민국’

(1) 현황 및 문제점

- ❖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분리·배제하는 문화예술정책
- ❖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문화예술 지원체계와 정책의 공공성 상실
- ❖ 생존의 위기와 창작·표현의 불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문화인

□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할 수 없는 나라

❖ 예술인이 살기 힘든 나라

- 문화계 블랙리스트(9,473명)로 찍히고, 고 최고은 작가는 굶주려 죽고,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상 수상한 가수 이랑은 수상 트로피를 50만에 경매 부쳐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 나라.
 - 문화계 블랙리스트(2015년 5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1,608인)
 - 예술인 연 수입 연 평균 1,255만 원, 예술인 2명 중 1명은 투잡(Two Job), 연 수입이 없다는 답변도 36.1%(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가 간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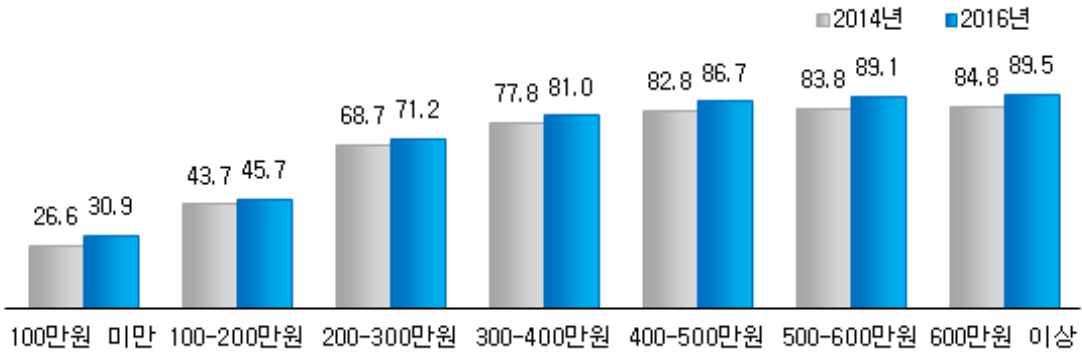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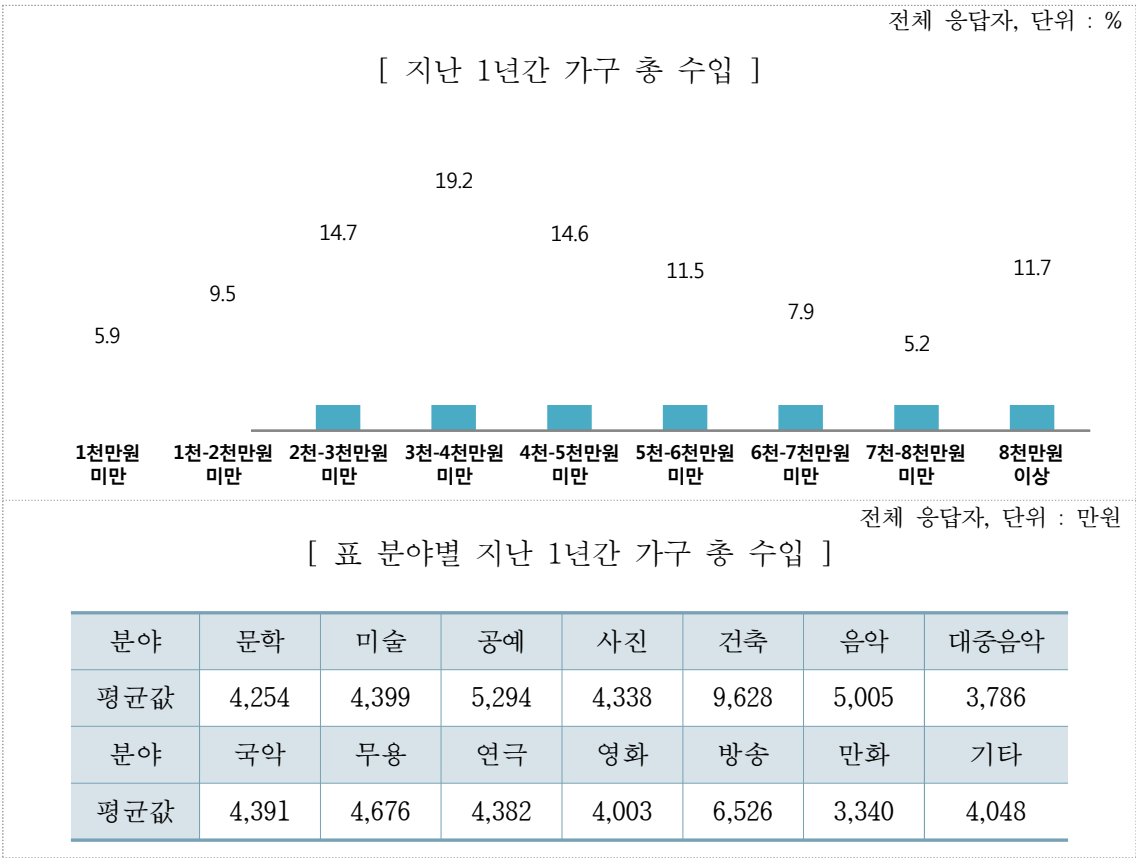
❖ 예술가 간에 소득별 격차가 큰 나라

- 지난 1년간 가구 총 수입은 '3~4천만 원 미만'이 19.2%로 가장 많음
 - 분야별로는 '건축', '방송'의 가구 수입이 가장 많았음

□ 소득에 따라 문화생활도 차이가 나는 나라

❖ 소득에 따라 문화예술 관람도 양극화된 나라

-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관람률 증가, 소득별 격차 여전



—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30.9%, 100~200만 원은 45.7%로 조사되어 2014년 대비 각각 4.3%포인트(p), 2.0%포인트(p) 증가.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 관람률 89.5%와 비교할 때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조사

(2)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 평가

- ❖ 이명박 정부의 코드 인사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문화를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反문화적인 행위
-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소위 돈 되는 문화 등 경제적 가치 중심 추구하여 문화예술이 가치는 사회적 가치는 외면, 기초예술과 문화의 다양성 훼손
- ❖ 이명박 정부의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의 증액,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산 2% 목표 등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은 나름 성과

○ 박근혜 정부 문화행정 파행의 연대기

- 2013.8. 박근혜 대통령, 문화부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며 좌천 지시
- 2013.9.6. 메가박스, 보수단체의 협박과 위협을 이유로 개봉 하루 만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 2013.11.6. 제8회 런던 한국영화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개막작 변경, <설국열차>, <광해>가 제외되고, <도둑들>로 교체됨
- 2013.12.13. 월간 <현대문학>,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이제하, 정찬, 서정인 작가의 소설 연재를 중단함
- 2014.3.27. 문화부의 지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의 폐지와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 2014.6.12. 대법원, 2012년 대선 기간 후보에 대한 풍자 포스터를 붙였던 이하 작가에 대해 무죄 판결.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결과
- 2014.7.17.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재 제1차관 면직 처리됨. 유진룡 장관 면직은 청와대 인사 청탁 거부, 국무회의 등에서의 소신발언 등과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특검에서 확인됨
- 2014.8.11.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을 전시철회 통보한 것에 반발하자 홍성담 작가와 전시에 참여했던 동료작가들인 이운엽, 홍성민, 정영창 작가 작품 철거됨
- 2014.11.13.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 거부
- 2014.11.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5회 서울연극제가 신청한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에 대한 대관신청을 심의, 탈락시킴
- 2015.1.23. 부산시, <다이빙벨> 상영 논란 등을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해 사퇴 종용
- 2015.5.5.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영화제 지원 예산 40% 삭감, 영화 <다이빙벨> 상영 때문
- 2015.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박명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임명. 박위원장은 전문성 결여, 심사과정에서의 의혹, 방통심의위원장 당시의 정치적 편향성 등 논란이 많았음
- 2015.9.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 연출가가 2013년 발표한 연극 <개구리>에서 박정희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연극지원 ‘창작산실’사업 지원 대상에서

-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배제되었다는 녹취록 공개. 뿐만 아니라 희곡분야에서 심사 위원 점수 1위였던 이윤택 작가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 2015.10.18. 한국공연예술센터,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팝업 씨어터 작품 중의 하나인 <이 아이> 공연을 방해
 - 2015.10.24.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프로그램의 협업작품 <소월산천> 공연에서 박근혜 연출가가 맡은 연극부문을 제외할 것을 요구
 - 2016.3.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이 컸던 ‘프랑스 장식미술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을 경질
 - 2016.10.10. 도종환 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증거로 회의록 제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조작(삭제)을 지적하는 가운데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남
 - 2016.10.11.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이 언론에 공개됨.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지지 선언, 박원순지지 선언한 9,437명의 문화예술인의 이름이 포함
 - 2016.12.1. 박영수 특검 임명하면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리가 밝혀지면서 김종덕,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화부 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구속

□ 잘못된 문화행정과 사회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문화인(예술가·체육인)

- ❖ 제17회 쇼팽 콩쿠르(2015)에서 우승한 조성진 피아니스트
- ❖ 영국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2016)을 수상한 한강 소설가
- ❖ 베를린 국제영화제(2017)에서 여우주연상 수상한 김민희 배우
- ❖ 김연아 동계올림픽 피겨 여왕, 박태환 올림픽 수영 영웅 등 탄생

- 기량이 출중하고 역량이 뛰어난 문화예술인·체육인들은 문화예술·스포츠 국정농단으로 추락한 나라 망신을 국위 선양

3) 전략적 의의

- ❖ 문화주권을 바로 세우고,
- ❖ 분권과 자치의 시대정신에 맞게,
- ❖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익에 맞게,
- ❖ 문화정책을 재구성

(1) 필요성 : 파괴된 문화생태계를 복원하고, 무너진 문화인들의 자존심을 되찾아, 문화의 공공성 회복으로 새로운 ‘문화민국’을 실현함

- 문화주권은 시간주권 (여가권, 건강권), 공간주권(문화시설의 공공성), 문화권(접근성, 창작과 향유권)으로 구성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 필요
- 실행원리는 문화자치(‘팔길이 원칙’,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분권(‘보충성의 원리’,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행정단위가 서비스의 책임을 맡음), 문화정의(다양성, 통합성, 행복과 사회적 가치 추구)로 구성

□ 문화가 주는 새로운 교훈 : 다양성이 주는 역동성, 하나 되는 신명, 재미와 의미의 배움터

❖ 광장이 가르쳐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민주주의 교육의 장

○ 문화로 민주주의를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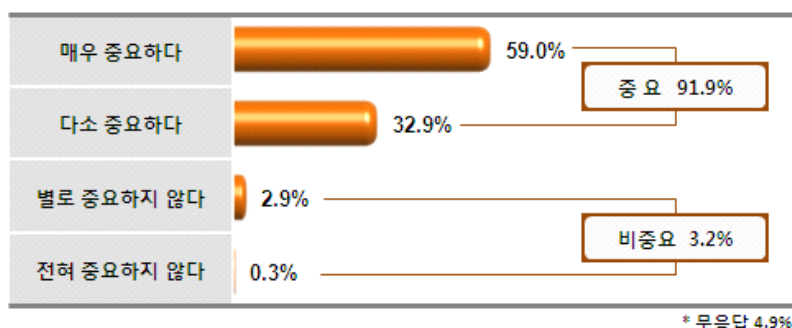
- 문화로 함께 하는 즐거움, 참여하는 기쁨
- 문화가 주는 사회의 역동성, 더불어 하나가 되는 놀라움

(2) 정책수요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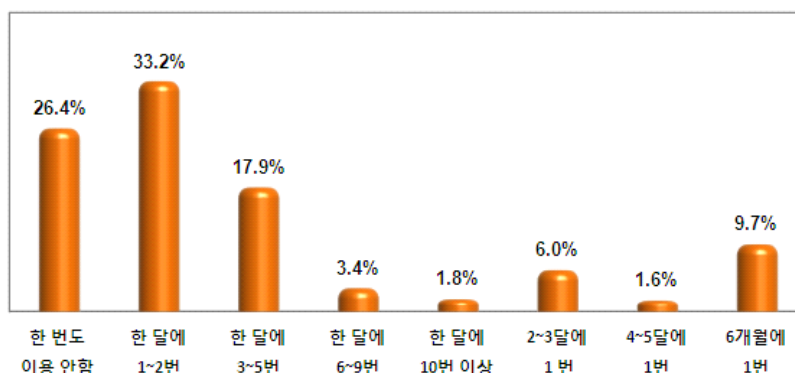
□ 문화의 중요성은 인식

❖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는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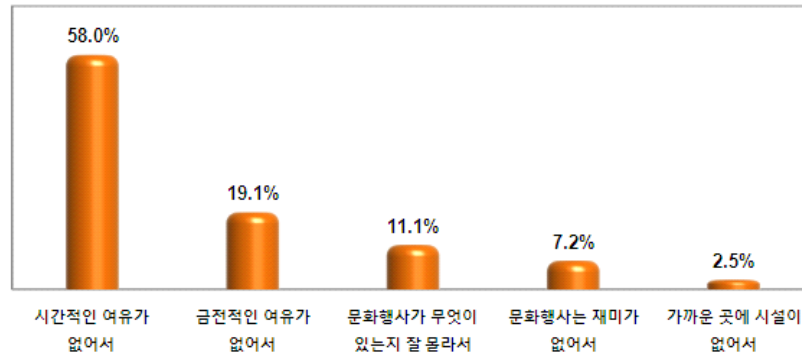
- 일반 국민의 대다수인 91.9%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인식 (2014,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 이용 빈도(일반 국민) (2014,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적게 이용하는 이유 (2014,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여유 없는 일상

❖ 노동 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고, 여가 시간을 늘여 삶의 질 높이기

○ 시간적·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국민의 삶의 질 최하위 수준

- 연간 1인 노동시간 세계 3위 : 2,113시간(OECD 34개 주요국가 중 3위), (2015, 국제무역연구원)
- 여가불만족 원인 1순위 : 시간 부족(46.1%), 2순위 : 경제적 부담(40.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 향유 장애 1순위 : 시간 여유 부족(48.5%), 2순위 : 경제여유 부족(20.1%), (2015 국민여가실태조사)
- 체육활동 참여 중단 이유 1순위 : 가능시간 부족(50.4%), (2016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여가 여건지수 감소 : 65.0점(14년도) → 62.1점(16년도),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 삶에 대한 만족도 낮음 : OECD 38개국 주요 국가 중 31위, (2016 OECD Better Life Index)

□ 공동체 붕괴

❖ 마을과 동네문화 활성화로 공동체 복원

○ 사회적 유대감 저하 및 타인에 대한 신뢰도 감소

- 공동체(지원관계망) 지수 최하위 : OECD 주요 36개 국가 중 36위(2016 OECD Better Life Index)
- 사회갈등지수 높음 : 1,043점으로 OECD 국가 중 5위(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행복지수 개선 방안 1순위 : 공동체 신뢰성 회복(20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부모 부양(가족 돌봄) 견해 지속 감소 : 40.7%(2008) → 30.8%(2016) (2016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불신

❖ 거버넌스로 정부 및 정책 신뢰 회복

○ 국정농단, 비선실세 등으로 인한 권력의 도구화, 공익의 사유화 등으로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예술분야 공공지원에 대한 비공정성 : 예술인의 70.7%가 공정하지 않다
- 예술정책 결정에 대한 예술인 의사 반영 하락 : 9.9%(2009) → 4.2%(2015)
- 정부 신뢰도 하락 : 47점(2009) → 35.8점(2016)
- 정부 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믿음 저하 : 62점(2015) → 59점(2016) (2016 사회통합 실태조사, 행정연구원)

□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 예술강사 문제 해결하고 예술교육의 질 확보

○ 학교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이 예술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경력 강사 연속 고용 보장(무기직), 예술강사 법안 마련(예술강사라는 명칭을 명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고용주로 하여 4대 보험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장 요구

- 현재 학교예술강사 수는 5,047명, 초·중·고 수혜학교 수는 10,731개교임

4) 정책방향

- ❖ 양심과 표현의 자유, 사상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제도화
- ❖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개선
- ❖ 문화와 대화가 있는 휴일을 보장하고 여가문화를 확산
- ❖ 문화분야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 문화행정 혁신하여 '지원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원리 정착
- ❖ 문화외교 강화하여 아름다운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미지 강화

6대 정책분야	6대 핵심정책	세부 정책내용
표현의 자유	1. 문화의 다양성 존중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백서 발간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예술진흥	2.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인 창작 및 발표 환경 구축 -예술인 최저임금제 실시
문화향유	3. 지역·생활·여가문화 확산	→ -지역문화 진흥 -생활문화 활성화 -여가문화 확산

문화인력	⇒ 4.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	-마을문화공동체로 통합·발전계획 수립 -기존의 문화계 일자리 질 개선 -예술강사 문제 해결 -4차산업혁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화행정	⇒ 5. 문화행정 혁신	⇒	-정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분권자치로 -문화행정의 중간 지원조직 혁신 -정책 및 서비스전달체계 전면 재정비
문화외교	6. 문화외교 강화		-문화외교의 내용 재구성 (한류 중심에서 광장문화 포함) -해외 문화원 확충 -세종학당 문화강사 확충
지역문화	7. 문화로 마을공동체 회복		-지역문화발전기본계획에 마을문화발전 계획 수립 포함 -생활문화를 마을문화로, 생활문화동아 리지원사업을 마을문화활동가 배치 사 업으로 전환 -대통령 직속 마을국가위원회 설치(각 부처 마을사업 조정) -생활문화진흥원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지역문화전문인 력과 마을문화활동가, 문화단체 종사자 보수 교육 등을 담당할 문화인력개발 센터 설치 -전국 3,502개 읍면동에 문화·체육·관광 등 활동가 3명 등 1만 명 이상의 마을 문화활동가를 공공서비스 일자리로 창 출

(1) 양심과 표현의 자유, 사상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제도화

□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 설치

❖ 특별검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민과 관이 참여하
는 진상규명조사위 설치,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마련

□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문화기본권 구체적 실현방안 마련

❖ 문화통합이용권 제도, 문화의 날 행사 등 문화복지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관련 사업들을 전면 재편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의 날’ 행사 등을 전수 조사한 후 문화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새롭게 마련. 현재 ‘문화의 날’ 행사는 관변 행사, 이벤트 행사로 전락.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 개선

□ 예술인들의 생활환경 조사를 토대로 실효적인 대책 마련

비전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민국

목표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권익 신장	예술인 생활 활력
추진 과제	① 시·도별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② 예술인행복코디네이터 운영 ③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 구성·운영 ④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⑤ 예술인 오픈 포럼 운영	① 표준계약서 정착 ② 청년예술가 인턴지원 및 일자리 지원 ③ 우리 동네예술가 양성·지원 ④ 예술인파견지원 참여기관 매칭 지원 ⑤ 유희 공간 활용 ⑥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① 예술인자녀 보육 지원 ②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③ 예술인 휴·안심프로그램 운영 ④ 예술인 법률자문단 운영 ⑤ 예술인 해외 세종학당 문화교사 파견 ⑥ 예술인 패스 확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지원기구 및 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진흥 대폭 확충

- 7천억 원까지 조성되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현재 420억 원대로 고갈 상태
 - 현재 체육기금 및 관광기금에서 매년 각 5백억 원씩 지원받고 있는 상황
 - 재원확보 방안을 위해 담배세 등에서 일정 기금을 문화예술기금으로 출연

(3) 문화와 대화가 있는 휴일을 보장하고 여가문화를 확산

-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생활문화공간을 읍·면·동 마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마을 문화활동가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적 욕구와 요구를 수용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생활문화의 제도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생활문화공간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 ‘문화통합이용권’사업 전면 재검토

- 문화통합이용권 사업이 기초예술과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 1회성 문화향유 사업이 아닌 일상 속에서 문화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가문화와 생활문화로 연계하여 구체화

[문화통합 이용권 현재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내역	48,651	49,346	73,189	96,754	78,520	99,226
	복권기금 34,300	복권기금 34,946	복권기금 40,866 관광기금 10,225 체육기금 700	복권기금 42,643 일반회계 10,500 관광기금 10,627 체육기금 4,230	문예기금 55,270	문예기금 69,875
	지방비 14,351	지방비 14,400	지방비 21,398	지방비 28,754	지방비 23,250	지방비 29,351

(4) 문화 분야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예술인 최저임금제 도입

생존 벼랑길에 몰린 예술인들

- 고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굶주려 죽은 사건 이후 예술인복지법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예술가들의 삶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음
- 예술인 1인 평균 연 수입이 1255만 원, 그래서 예술인 2명 중 1명은 알바나 투 잡(Two Job) 생활을 하고 있음. 연수입이 없다는 응답도 36.1%, 문학은 연 수입 평균이 214만 원, 미술작가는 614만 원 등 장르 간, 예술작가 간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함(2016 예술인 ※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 2월28일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신의 놀이’로 최우수 포크상을 수상한 가수 이량은 “지난 달 총 수입이 42만 원, 2월달은 96만 원이다. 상을 받지만 상금이 없더라. 혹시 이 메탈릭 디자인의 소품을 구입하실 분 있느냐”며, 상패를 즉석 경매해 부쳐서 50만 원에 낙찰되었음

○ 문화와 교육분야 임금 근로 조건의 질이 매우 열악하고, 상대적 소득과 근로 환경 차가 매우 큼으로 인해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큼. 이에 따라 강사 등의 임금을 현실화

- 특히, 예술강사 문제 해결과 예술인 최저임금제 같은 정책이 요구됨
- 문화분야 융합형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문화분야 쪽의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보다는 전문성과 수월성을 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함
- 미래 4차산업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 투자한다는 정책 사고의 발상과 전환이 필요함

(5) ‘지원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원리를 정착

□ 문화행정을 미래지향적이며 시대정신이 자치·분권에 맞게 개혁

❖ 문화행정의 민주화와 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재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화진흥원, 출판진흥원 등 문화분야 지원 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문화정책의 국가주의 타파하고 추락한 문화행정의 신뢰 회복
- 문화분야 생태계와 전달체계를 자치분권시대에 맞도록 재편
-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 전환

□ 참여정부 문화비전 『창의한국』 이후 중장기 정책계획 부재,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

○ 참여정부 2003년 9월부터 시작하여 8개월을 준비하여 수립한 문화비전 『창의한국 2.0』 수립

- 참여정부 때 공표한 「문화현장」 과 문화비전 『창의한국』, 새예술정책 『예술의 힘』 을 민주정부3기 계승이라는 점에서 성찰을 통하여 다시 수립할 때가 되었음

(6) 문화외교 강화하여 ‘아름다운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미지 강화와 평화국가 브랜드 구축

□ 해외 문화원과 세종학당 설립 확대

○ 이제 세계는 하드 파워로서의 군사력, 경제력이 가져오는 갈등과 긴장을 문화의 힘으로 소통과 대화, 타협, 갈등 등을 통해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 파워 시대 (조셉 나이, 『소프트 파워』)

- 문화외교는 외국 정부가 아닌 외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 영국은 ‘브리티시 카운슬’, 프랑스는 ‘켈터르 프랑스’, 일본은 ‘국제교류기금’, 중국은 ‘공자학당’ 등 설립하여, 전 세계에 자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소개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

○ 콘텐츠산업은 문화상품으로서만 접근하면 지속가능하지 않음. 트렌트에 언제든지 밀릴 수 있고, 정치·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큼. 따라서 신뢰에 의한 시장이 서지 않는 한 불안한 요소임. 신뢰는 상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이전에 문화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이는 전통과 역사, 문화와 언어 등이 바탕 됨. 따라서 해외에 설치하고 있는 해외 문화원과 세종학당 등 문화외교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

- 이제 우리나라도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넘어 전통문화, 현대예술, 민주주의 축제 등으로 교류 분야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국정농단 등으로 추락된 대외 신뢰 회복과 사드 등으로 국제 사회 갈등 촉발의 위기 국가에서 평화국가, 문화국가 이미지로 국가브랜드 호감력을 드높이는 계기가 필요함. 이를 위해 해외문화원과 세종학당 등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문화원은 문화관련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능동적 문화외교를 수행함
- 해외 동포들의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국민 개념을 영토 중심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혈연의 소중한 인연도 자원으로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음. 즉 해외문화원이나 세종학당이 문화 외교 공간뿐만 아니라 동포의 문화 사랑방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등 지원 강화
- 세종학당은 현재 한국어 강사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는데, 젊은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활동가들을 파견하여 해외 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건문을 넓히고 문화활동 등의 관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민간 교류를 하게 할 필요가 있음

토 론 1

문화유산 활용 확대로 지역문화 진흥

강태호(동국대 교수)



문화유산 활용 확대로 지역문화 진흥

강태호 /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kth@dongguk.ac.kr

□ 문화유산을 통한 국민 화합 추진

- 헌법 제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존관리는 국가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임
- 문화유산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자산으로 국민의 자긍심 원천이자 국민통합을 위한 훌륭한 콘텐츠 역할
- 문화유산은 보존해야 할 대상이자 교육, 관광, 도시 재생의 원천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융복합과 활용을 위한 소중한 문화자산임

□ 문화유산 활용 확대로 지역문화 진흥 기반 확충

- 매장문화유산 발굴 후 출토유물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립박물관 수장고 등에 보관·관리, 그러나 유물이 소재한 지역의 전시관·박물관은 유물이 없어 지역 문화 콘텐츠의 부실 초래
- 출토 유물의 현지 전시 원칙 준수, 국립박물관의 유물 대여 및 이관 확대로 지역 주민 문화관람권 확대 및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
- 지역 박물관의 수장고 확충 및 큐레이터 충원 확대로 지역 박물관의 전문성 및 위상 제고
- 발굴 후 방치된 전국의 보존유적을 유적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역사문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쉼터로 제공

□ 문화유산 평생교육 콘텐츠 활용 활성화

- 문화유산은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교재, 체험을 통해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원천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자유학기제 시행관련 문화유산 관련 직업탐색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청소년, 중장년,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답사 지원, 전통 공예강좌 활성화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삶속에서 문화유산 가치가 자연스럽게 내재화 되도록 문화시민 양성
- 도제식 교육 중심의 전통 장인의 양성 시스템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전통 장인 배출 시스템 확충

□ 지역문화유산 기반 일자리 창출

- 지역문화유산 관리자, 지역문화유산 해설사 등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유적지, 고택, 전시관 등 주요 문화유산에 자격증 소지자 의무 배치하여 관리 전문성 도모 및 관리 수준 향상
- 지역문화유산의 상시관리를 통하여 훼손 방지 등 예방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지역별 문화유산 돌봄이 사업의 확대
-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 지역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전문가 양성, 지역문화유산의 활용 및 조사연구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적극 지원

토 론 2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에 대하여

김윤송(지리산문학관 관장, 자연치유학 명예박사)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에 대하여

김윤송 / 지리산문학관장

김기봉((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상임이사)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
박종관((사)충북민예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 “19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문화의 대응”
여기에 토론을 맡은 6인중의 1인입니다.

여기 대표들의 발제문은 문화대표의 글이라기보다는 국무총리의 글 같습니다.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지 않고는 못 쓸 글들입니다. 일단은 감탄합니다.

“촛불시민들은 문화와 예술로 광장을 축제로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부정한 권력을 탄핵시킨 위대한 대한민국인” 결국은 문화민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부터 촛불혁명, 촛불시민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상을 줄 대상이 분명치 않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튀니지, 이집트, 예멘의 혁명을 이룩한 아랍의봄과는 비교도 안되게 비폭력의 모범적인 평화시위에 의한 정권교체, 가히 혁명적인 평화시위니 노벨 평화상의 가치를 구현한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추진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달 5월 ‘2017년 지역문학관 전문인력·프로그램 지원 사업’ 주관처로 인천문화재단을 포함, 전국 4곳의 광역문화재단을 선정했다.

인천문화재단이 올해 지역문학관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문학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학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문학관의 전시·행사 역량 강화 등 지역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문학진흥법 제2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공사립 문학관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강원권에 소재한 문학관이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문학전문인력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이며, 중복 지원 가능하다.”

올해 지역문학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문화재단이 주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충청권은 대전문화재단, 영남권은 부산문화재단,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은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중부권(수도권및강원권)은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여 공모, 심의,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자치를 실현할 차세대 문화활동가 양성

－ 문체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선정, 7개 기관 지역 특화 교육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나종민,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지역주관기관 7개소(권소시업 기관 포함)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지역문화기관의 많은 관심 속에서 15개 기관이 이번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문체부는 최종적으로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광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울산문화재단의 총 7개 기관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

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앞으로 2년간 해당 지역을 비롯한 권역 전반을 아우르며 지역문화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아울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은 사업주관기관을 맡아 이번에 선정된 각 지역의 기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문화활동가란 명칭을 자격증있는 명칭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가령 지역문화설계사 또는 지역문화복지사 등등요. 명칭이 정해지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도 바뀌야 하겠지요.

전국에 지역문화재단이 시도별로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빠진 기관은 서울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입니다. 다 치면 17개 시도의 16개 재단이 됩니다. 경북은 문화재단 설립 촉구중입니다.

두 대표의 글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기금이 고갈되어 앞으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의 방조범으로 기능하여 비판받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문화의 수도권집중화, 중앙집중화의 폐해가 많은데 이 폐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일조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나주혁신도시로 이주했어도 서울중심인 건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사건으로는 위의 광역 문화재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국의 문화권을 중부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4개권으로 나누어 4대광역 문화예술위원회-가령 중부권 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하면 중앙집중화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5등분하여 4대광역권에 균분하고 남는 1등분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하도록 하면 지역문화가 골고루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박대표의 발제문에 문화예술단체공동협약서에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도 있습니다. 사건으로는 예총, 민예총에 대예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총에서 대중예술(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을 분리하여 대중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하여야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여 공동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대표의 발제문에 드골 연립정부의 앙드레 말로 장관을 능가하는 시인장관의 출현으로 도종환 장관을 쫓고 있습니다. 앙드레 말로는 1958년 드골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에 10년 동안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 명성을 떨치었고, 우리나라도 이어령 평론가가 노태우정부의 초대 문화부장관으로 1990년 1월 3일부터 1991년 12월 1일까지 역임하며 명망도 좋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건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정부를 몰락시킨 주범이고 이질적인 세 영역이 묶인 거대정부인 만큼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부와 체육관광부를 분설하고 문화부가 문화영역을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대정부의 단골메뉴인 문화예산 1%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술인을 바로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행정 경험이 없는 대학교수들은 바로 장관관에 임명되는데 왜 예술인은 안 되는 것입니까. 민예총 계열은 유인촌 장관의 악몽이 있

을 것입지만 개별사항입니다. 도종환 장관도 실상 국회의원 출신이니 순수 예술인이 바로 장관에 임명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부는 예술인이, 체육관광부는 체육선수가 바로 장관에 임명되는 전통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표의 발제문에 생활문화진흥원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마을문화활동가를 공공서비스 일자리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또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의 주도권 다툼이 일 소지가 있으니 생활문화나 마을문화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장관이 의원시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문학진흥법을 강화하여 지자체는 지역 폐교를 문화영역에 기증하거나 매입하여 연고있는 문학인의 문학관을 설립하여 문학활동의 거점기관이 되도록 한다고 법에 명기하길 바랍니다.

가령 경남 함양만 해도 함양군 휴천면의 휴천초등학교는 폐교상태로 있는데 이 학교에서 허영자 시인이 탄생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허영자문학관을 설립한다면 문학활동에 얼마나 보람있겠습니까.

또 함양군 수동면이 소설가 이외수의 탄생 고향인데 여기서의 상내백초등학교도 폐교 상태로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외수문학관을 설립한다면 문화, 관광의 중요한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청과 교육청이 얹힌 문제인 만큼 국법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인정부는 혁명정부적 성격으로 갑자기 들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여유가 없었다가 이를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과문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 중에 예술인은 누가 있습니까. 문화분야를 담당할 문화계 인물은 누가 있는지요. 문제인정부가 문화정부가 되도록 누가 역할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장관에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반드시 문화계 인사가 포함되도록 제도화하길 바랍니다.

김대표는 예술강사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문화원의 문화학교를 통해서도 1년에 한 곳에서 수십 명의 예비 예술인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술창작은 예술인의 혼을 기르는 것이지 밥벌이를 보장받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급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아 생명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생존이 보장된 뒤에야 예술활동을 하든 학술활동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일하기 싫어 놀고먹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스템인 국민의 기본급 제도를 시행해야 예술인들의 기본생활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도 국민의 기본급 법제화에 동참하고 강력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 론 3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

박상문 ((사)해반문화사랑회 이사)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

박상문 /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사)해반문화 이사

1. 문화는 정말 중요하다.

오랜만에 새뮤얼 헌팅턴의 저서 “문화가 중요하다”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새뮤얼은 이 책의 서문에서 “문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화는 왜 중요한가? 라는 이유로 1990년대 초에 1960년대 경제상황이 비슷한 한국과 아프리카의 가나에 대한 경제자료를 검토,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후 한국과 가나를 비교해 보니 경제소득은 한국이 가나보다 GNP가 15배나 높았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은 가나보다 민주 체도를 착실히 실천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나간 결정적 요인은 ‘문화’에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화의 위상에 대해 가장 멋진 말은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한(Daniel Parrick Moynihan)이 한 말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보수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정치를 정치 자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

문화는 정말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문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답한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말이 동의한다. 그러면서 과감한 문화공약들을 남발한다. 우리 국민들도 문화가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91.9%가 중요하다고 인식(2014년,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 조사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9대 조기 대선에서는 문화 관련 공약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문화정책 공약은 미미하다. 앞서 김기봉 대표가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핵심과제, 그리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주요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문화관련 의제는 차별 없는 공동체를 지양하는 국정목표부문에 ‘문화체육 활성화’라는 제목의 주요국정과제가 모호하게 적시 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방향은 민주연구원의 정책시리즈 ‘문화정책방향’에 세부적으로 담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게 된 연유를 돌아보자.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논단은 K-컬처, K-스포츠 라는 문화사업에서 시작된 ‘문화계이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최순실 일당은 문화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화는 밥이고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소유욕이 발동되고 자신들의 소유욕을 방해하는 대상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였고 크게 먹으려다 보니 문화관광체육부를 권력 안으로 편입시켰으며 이에 반발할 만한 세력들을 블랙리스트로

고립시키는 폐단을 저지른 것이다.

문화가 밥이고 돈이 된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는 밥이고 돈이기도 하지만 광장이고 촛불이라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91.9%나 되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새 정부는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된 정부이다.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과 모두가 공정한 우리 미래사회를 위해 할 일이 많은 정부임에 틀림없다. 새 정부는 전 정부가 입만 열면 외쳤던 “문화융성”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고 국민들은 “문화융성”이 메아리에 불과 했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문화는 말로만 외치는 치장꺼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가장 견고한 도구이자 방책이기에 국정운영 기조와 비전, 그리고 국정목표 실행과정 전반에 문화적 뉘앙스가 세세하게 스며드는 문화정책을 세워야 한다.

2.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을 기대한다.

필자는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기대한 바가 크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발표한 문화예술 비전,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예술정책을 온 국민에게 공표한 대국민 성명서였다.

아울러 지난 주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도종환 장관의 취임사는 예술인과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문화예술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피력한 감동적인 메시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발표한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발표한 <장관 취임사>는 가히 문화적 언어로 표현된 최고의 ‘문화예술 정책서’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 두 개의 글이 문화예술계와 국민에게 준 감동을 넘어, 국민들이 새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정책서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1>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문화예술 비전.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다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참 고맙고 영광스런 그런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화예술인 여러분! 촛불광장은 우리 문화의 힘이 하나로 뭉쳐진 ‘국민 문화한마당’이었습니다. 광장을 평화와 감동으로 이끈 것은 위대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문화로 구시대 구체제를 이겨 냈습니다. 적폐세력들은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계를 길들이고 장악하려 했지만 성숙한 우리 문화는 오히려 낡은 정치를 바로 잡아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고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품격있는 문화예술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구체적인 정책공약은 앞으로 따로 발표하기로 하고 오늘은 문화예술정책의 몇 가지 기본방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을 발표하면서, 법정노동시간과 휴가를 준수하여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직장인들에게 저녁과 휴일 그리고 휴가를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들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고, 문화예술의 소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중산층에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누구나 문화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독서, 음악,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국민들이 폭 넓게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득, 지역, 연령에 따른 문화소비의 격차가 아주 큼니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간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에서도 지역이 소외받지 않는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의 서울 집중은 더 극심합니다. 문화 활동의 80% 이상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서울시민과 같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식거점, 문화거점이 전국 곳곳에 골고루 퍼져있어야 합니다. 문화균형발전으로 지역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하여, 문화기반이 낙후된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문화가 다양해질수록 문화도 삶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민족문화 세계화를 넘어,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체능교육시간을 늘려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역시 다양해질 것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문화예술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창의놀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예술인 강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으로 키워지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국가재정을 도구로 국민이 향유할 문화 권리를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그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영화인, 출판인들의 추천을 받아 기관운영의 장을 선임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기관, 예술계 간의 공정성 협약도 체결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도 확보하겠습니다. 덧붙여, 문화예술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찾아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와 같은 문화창조산업은 신성장산업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늘리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많은 예술인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을 빈곤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유명무실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작업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술인복지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만 실행 안되고 있는 예술인복지금고를 조성하여 긴급생활자금, 작업실 전세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앵페르미땅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창작공간 및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폐산업시설, 원도심 같은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청년기획자와 예술인들이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작업공간을 잃는 일로부터 임대차 보호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산업은 세계의 자랑이며 우리의 미래먹거리이기도 합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유통중심의 불공정한 산업구조로 창작인과 중소제작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남용, 담합을 막겠습니다.

영화, 방송영상물, 출판, 웹툰, 캐릭터 등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1인 창작과 중소제작사 위주의 투자, 용자를 넓히고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책 읽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문화예술이 맘껏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발휘하면 할수록 우리 민주주의는 커집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행복한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 건 누구나 누려야 할 문화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건국 100주년을 앞둔 대한민국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가족 여러분,
도종환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초록으로 반짝이는 유월입니다.
저 한 장의 나뭇잎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생명과 생동하는 힘과 나뭇잎을 나뭇잎이게 하는 녹색의 자기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뭇잎처럼 푸르게 살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기쁘기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의 실체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재판의 증언대에 선 장 아무개 부장은 자신의 자리가 “기쁨이자 자랑의 자리”였는데 2015년 지원배제리스트가 시작된 이후 “고통이자 슬픔의 자리”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러한 현실의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배제리스트가 한창일 때, 근 1년간, 제가 받은 유일한 지시는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였습니다. 한국문학 활성화 방안이나, 연극계 활성화 방안, 창작음악 활성화 방안과 같은 지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척 슬픈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령이라면 밤새워서라도, 아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할 텐데, 지난날 지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장 아무개 부장의 증언을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연극, 문학, 창작음악 등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나은 계획을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씩씩하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오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다시 기쁨의 자리, 자랑의 자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들어 있는 생명력과 생동하는 힘이 푸르게 분출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들어 있는 빛나는 능력과 지혜를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 안에 들어 있는 영혼의 촛불이 밝고 환하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십시오.

“공무원이 무슨 영혼이 있느냐.”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문체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유, 여러분의 감수성, 여러분의 상상

력, 여러분의 행동이 그대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정서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부터 시를 읽고 연극을 보고 음악을 즐겨듣고 스포츠를 즐기고 자주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되십시오.

버트런드 러셀은 “사랑에 대한 열정, 지식에 대한 탐구, 고통에 대한 연민”이 자기 인생을 끌고 온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고통에 대한 연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어려운 예술인, 체육인들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인들과 자주 만나십시오, 그들과 소통하십시오.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자주 가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예술, 그들이 보여주는 체육의 능력은 오롯하게 국민들에게 삶의 활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문화향유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에서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일을 했던 분들에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농단에 관여한 문화행정에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쇄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안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면서 형법위반입니다. 동시에 헌법위반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가족 여러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기가 매끄럽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올림픽이 되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고 국민들의 협조와 다른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심기일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일하셔야 합니다. 저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손잡고 노력합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올림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입니다.

어디서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누구나 집 근처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지역 스포츠클럽 등 자생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활동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쉼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오래 행복합니다. 낡은 반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며,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야 하지만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관광의 길을 모색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문화적으로도 균형 있게 발전하는 관광이 되도록 합니다.

모든 지역의 문화가 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나라 곳곳이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가진 문화의 고장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문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를 생활 속에서 향유하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지역문화가 꽃피고 문화분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감성과 상상력과 창의성은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분야가 정서입니다. 콘텐츠의 성공을 결정짓는 10%가 기술이라면 90%가 문화입니다. 콘텐츠의 경쟁력은 재미와 감동 창의성과 스토리가 좌우합니다.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나 창조력을 보호하고 창작의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문화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체부가 됩시다. 문화는 깊이가 있어야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깊어지셔야 합니다. 감각이 깨어 있는 사람이 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됩시다. 들어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의 진흥은 나라 전체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자긍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온 여러분께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리며 첫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일 네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만일> 이라는 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토 론 4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 ‘(가칭)지역문화진흥원’ 설립을 요구함

이춘아(대전문화재단 대표)



새 정부와 지역문화정책 ‘(가칭)지역문화진흥원’ 설립을 요구함

이춘아 / 대전문화재단 대표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체계를 갖추고자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에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문화의 중요성 확대와 관련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과 조직이 요구되고 있음. 애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빠졌음.

지역문화 관련 사업은 확장되고 이를 실행하는 지역문화재단 등도 늘어나고 있으나 중앙단위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지역과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과 실천을 보완할 수 있는 기구가 현실적으로 필요해지고 있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문화정책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조광호, 2016)에 따르면 지역문화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갱신 및 지역문화정책사업전략 패키지모델 구성, 지역문화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및 지원, 사업현황정보아카이브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노영순, 2016)에 따르면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것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문화종합계획 수립 활성화, 지역문화진흥 관련 주체별 역할 및 기능 명료화, 지역문화사업 전달체계 정비,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조직 틀인 ‘지역문화진흥원’ 같은 기구 없이 문체부의 지역전통문화과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움.

아래는 [지역문화정책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부분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지역문화정책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항목 사업예산은 총 155,306백만원 수준이며 이 중 시설 및 공간조성(하드웨어) 관련 자본비적 성격의 예산이 95.6%이고 그 외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소프트웨어)과 인적 자원 운용(휴먼웨어) 관련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4.4%로 구성. 이는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이 의도했던 지역상황에 적합한 자율적 예산 운용이라는 합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차원의 지역문화진흥계획에

서 원하는 균형적 발전 및 문화생태계 차원에서의 접근과는 상대적으로 동떨어진 정책사업 추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문화생태계 구성의 기반구조에 맞게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람 즉 인적자원(휴먼에어)을 중심으로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활동(소프트웨어)을 총괄하고 지역과 거버넌스하며 확대할 수 있는 전문 조직기구가 필요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형성을 중요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추진 관계자들이 지역문화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문화정책 사업 실행 및 지원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문화정책사업 통합라운드테이블 운영이 요구됨. 지역문화정책사업의 특성상 추진양상이 다각화되어 있어 행정담당자와 자문위원회, 추진사업단, 위탁기관, 사업컨설팅단 등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사업추진 및 지원주체들이 통합적 구조로 움직이기 보다는 각각 추구하는 정책목표 및 특성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움직이고 있어 통합적 지원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문화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의 추진관계자(행정담당자/전문가/전문기관 등)이 사업과정에 대한 방법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정책사업의 추진효과는 높이기 위한 연계방안 논의 구조 틀로 ‘지역문화경영포럼’이 필요함. 이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과 구조적으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방안 모색이 될 수 있음. 또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중심의 정책추진 지향에 대한 기본방향을 견지할 수 있으며 정책추진 거버넌스의 중요 모체가 되는 지역문화정책전달체계 구성의 기반을 갖추 수 있을 것임.

=> 지역문화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연계 및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사업 총괄설명회를 연례화함.

지역문화정책사업과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부처협력형 정책사업 추진구조의 도입이 요구됨. 지역문화정책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현장에서 추진되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장소적 범위 안에서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 및 협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적인 정책사업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을 일으키는 기본 바탕을 가지게 됨.

=> 각 부처(국토부-도시재생, 안행부-마을만들기, 농림부-도활사업 등)와 연계된 정책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면서 부처합동의 협력형 정책사업추진을 시도하도록 함.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을 기획 매개하는 전문주체 구성 및 지원

- 문화거버넌스 매개기능 중심의 사업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중앙차원): 중앙과 지역의 관계 매개를 통한 지역문화의 협치구조 형성 요구됨. 특히 문화특화지역사업의 경우 도시와 마을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지역경영 차원에서 광역단위의 컨설팅제도가 필요함.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정책사업자문단을 광역단위에서 운영하도록 함.
- 지역문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및 지원(지역지원 차원):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경영전문인력을 지역에 영입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지역현장에서의 지역문화정책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종합 현황파악을 위한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 구성

- 지역문화정책 사업 각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사업이 개별사업 단위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방향성과 상세한 추진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정책사업 포지셔닝 맵을 통해 정책의 거시적 맥락분석과 사업의 미시적 작동구조 파악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문화정책지형을 파악하고 그릴 수 있을 것임.

토 론 5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조성진 ((사)한국영성예술협회 예술감독)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조성진 / (사)한국영성예술협회 예술감독

‘문화의 힘’, 통합적 문화정책의 가능성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기조는 무언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상식적 또는 상식의 회복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빌려 ‘문화의 힘’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문화는 행복을 목표로 하며 가장 높은 가치다’라는 김구 선생의 생각에 동의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로 문화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장 높은 가치이기를 바란다.

내놓은 비전에 의하면 문화의 가치는 첫째는 차이와 다양성에 소통하고 공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가치이며 둘째는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가치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반영한 비전이라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다원화되고 복잡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도 문화의 힘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문화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정책은 단순히 문화담당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는 토론자의 주관적인 지향을 덧붙여 확대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문화의 영역이 우리 사회의 전면에 배치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18대 대선에서 전면에 등장했던 문화의제가 19대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사회적인 쟁점이 형성되면서 문화의제가 주변적인 의제로 한정 축소된 탓으로 보인다.

문화가 가장 높은 가치여야 한다는 것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부터 경제발전을 이루는 생산의 문화를 바꾸는 문제나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지방균형발전, 혐오문화의 해소, 기왕에 이룩한 풍요를 공정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일, 권위주의를 해소하고 참여적이고 자유로운 관계의 문화를 만들며, 정의로운 사회나 안전한 사회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는 문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미디어환경 등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문화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통합적 개념에 기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정국은 문화의 힘으로 이룩된 것이다.

지금의 촛불정국은 문화의 힘으로 이룩된 것이다. 촛불이 보여준 참여의 정신은 정치적 동원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최순실 사태는 윤리의 문제였으며, 국민 개개인의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리고 저들의 자존심을 깨운 것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었다. 높은 학력과 합리적인 사고로 오늘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낸 저들이었지만, IMF 때 금모으기를 하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자원봉사를 하며, 월드컵에선 붉은악마가 되었던 국민이지만, 참여정부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독재정권 하에서도 정치의 영역에선 움직이지 않았다. 저들을 막아낸 건 매스미디어였고 중앙언론이었다. 그리고 그 매스미디어와 중앙언론의 입술을 바짝 마르게 만든 건 SNS와 뉴미디어였다. 그렇게 세월호는 국민에게 공유되었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고, 정부의 무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게 되었다. 풍요로운 사회로의 진입은 다원화와 복잡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동안은 이에 값하는 소통 즉 정보의 공유가 부재했던 것이다. 즉 미디어환경의 지체현상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수구 꼴통들의 득세와 존립을 허용하고 국민들이 개돼지로 살아야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새정부의 문화정책 수립과정이 국민과 어떻게 공유될 것인가 그리고 그 소통에 기초한 문화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숙제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상징을 사용하는 문화적인 국정운영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디테일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그 진정성을 신뢰하는 것은 한 달 여동안 보여준 국정의 모습이 문화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상징을 사용하는 인문적인 정부이며 디테일에 강하다는 일각의 평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언론을 장악하고 예산권을 휘두르지 않고도 국민을 움직이는 공감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징의 활용은 가장 효율성이 높은 문화적 행위이다. 디테일은 그것을 실천해본 사람이나 인문학적인 기반을 지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정치공학이나 힘에 기대지 않고 국민을 움직이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진정치고 가히 문화정부라 할 것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위안부협상과 관련하여 일본 특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던진 말이다. 서구식으로 말하면 신사적인 것이고, 우리식으로는 문화(文化)다.

참여정부 역시 탈권위주의를 시도했으나 매스미디어는 그것을 무능이나 무례로 매도했고, 이를 바로잡아줄 미디어가 없었다. 권위의 근거가 되는 전문성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인증되고 독점되었다.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자가 왕따가 되어도 그들을 대변하거나 언론이 되어줄 미디어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은 국민이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그 내용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를 갖게 됨으로써 다중지성의 성격과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대에 걸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진정성을 지닌 행위가 왜곡 없이 소통되며 시를 시로 읽고 산문을 산문으로 읽는 수준의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상징을 활용할 줄 아는 정부의 국정운영과 그 상징을 읽어내고 조율하는 국민 사이의 소통은 그것이 바로 문화적 효율이며, 그러한 문화적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참여가 바로 창의한국이고 ‘문화의 힘’이다. 소외와 불균형이라는 지난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같은 기조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문화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중요한 의제들을 생산해 내야.

박종관 대표는 지역문화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중요한 의제들을 생산해 내야한다면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걱정거리를 짚어주었다.

1. 지역에서 공히 발생하는 문제는 문화관련 예산의 크기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2. 지역문화진흥법은 선언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응과 대안 마련이 필연적이다.
3. 지역문화재단의 자율권 강화에 대해서 목표지점을 분명히 하고 실행 안을 만들어야.
4. 문화진흥 관련기관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과 대안에 대해 필요한 일들을 찾아야.
5. 자율권이 약해지고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어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상화.
6. 지역이 스스로 지역문화 의제의 생산과 대안을 정책으로 설계하는 힘은 여전히 부족.
7. 총합론적 지역문화/필수 공공재 차원의 지역문화 논리를 넘어서는 지역문화의 지향지점.

난제가 쌓여 있다. 문화정책의 비전을 우선 차이와 다양성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라 했으니 이에 동의하면서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위의 난제들을 살펴보자.

먼저 세금을 나눠 쓰는 방식과 관련해 일단 대통령의 개헌 의지와 대통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이를 토대로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 개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는 별개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의 방향은 지방분권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중앙에서의 분권이다. 그러니 정부의 의지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 지역이 어떻게 소리를 내야하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지역문화의 의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몇몇 문화활동가의 소리만으로는 단단한 민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촛불정국을 이끌어낸 미디어환경의 변화가 이 의제 생산과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선언적인 법률 이상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외에 문화 외적 변수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은 23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더 많은 여행과 휴식을 위해 휴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의 개선이 문화를 만든다. 또 소득주도 성장은 문화소비를 늘려준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진흥법은 통합적 개념의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지역문화재단의 자율권, 문화진흥 관련기관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상화, 지역문화 의제의 생산, 지역문화의 지향지점의 새로운 설정 등의 문제는 따로 의견을 달지 않겠으나 이제까지의 문화활동가와 정책 담당자 간에 담론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와 국민 간의 새로운 공조방식을 고려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다.

지역문화포럼조차도 상징의 활용이다.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의 실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아니라하더라도 그 의도를 반영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 이후 지방자치체는 저마다 스스로의 상징적 기표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기표와 기의는 자주 어긋났다. 그것이 지자체의 캐치 프레이즈였던, <지역문화 다년간 종합발전계획>이던, 지역축제간 간에 거기엔 소통이 부재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상징은 인문적 기반이 빈곤했다. 지자체는 그 빈곤을 전문가 용역과 업체용역, 형식적인 거버넌스 등으로 메워왔으나 결과적으로 문화적 효율을 지닌 상징성을 만들거나 실질적인 크기의 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은 바, 앞서 지적한 미디어지체 현상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지역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소통과 미디어현상을 어떻게 지역문화의 해법에 결합시킬 것인가 실천하고 실험할 일이다.

토 론 6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은 누가 수립하는가?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은 누가 수립하는가?

전고필 /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깔끔하게 정리하신 두분의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문화정책을 보면서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가졌던 문화에 대한 애정과 실행력을 다시 복기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도달하려 했던 그 시대가 이처럼 난도질을 당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말로만 외쳐온 생활문화가 조금씩 일상 께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예술인들의 열악했던 창작거점도 조금씩 확보되기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교와 사회는 장르 예술로서 문화가 아닌 삶으로서의 문화를 수용하고 향유를 넘어 창조적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찰나였었습니다. 하지만 편가르기와 더불어 블랙리스트가 등장하고 나니 현장 기반의 예술은 이전 보다 더더욱 열악했었습니다. 공연으로 대표되는 장르는 그런 시기에도 활황이었습니다. 다만 생각이 담긴 공연은 오르지 못하고 한류니, 유행이니, 집객이니 하는 것들에 의탁하면서, 소위 생산성이라는 것, 즉 공연장에 오는 관객수가 마치 문화적 효과인양 집중하였고, 이런 계량적 정책은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 또 공연이 빠질리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저는 저토록 공연에 집착하는 정권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문화진흥 부분에서 이상스러움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생활체육회처럼 일사분란하게 생활문화 부분을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려는 기미였습니다. 정부가 문화에 눈을 밝히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는 이견이야 없지만 이상스럽게도 어느 분야나 특정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화가 지닌 다양성의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역의 문화인력은 고령화 되었고, 신진 인력은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장르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이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탓이라고 여깁니다. 각종의 예술대학 등을 통해 작가로 들어서려는 신진 세력들은 작가라는 이름 대신에 예술강사라는 직함을 달고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러운 예술가 대신에 자기 전공의 영역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펼치면서 많지 않지만 호구책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장도 굳이 신진예술가의 진입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술위와 문화재단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데, 파이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든데 숟가락을 든 이들이 많아져서 좋을 턱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창작자분들이 여기까지 고민하시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적어도 정책 수립의 기본 단계는 현장의 생태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진입 예술인이 점점 소멸되고, 작지만 수입이 보장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바라보면 예술인의 복지정책이나 자립구조를 위한 지원이 어느곳에 서 있어야 하며, 이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메트릭스를 짜야 할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설상 가상으로 이런 현상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경사회로 대별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생산 양식이 무너져 가고 급격하게 탈농업,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남은 농업은 기계화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주거 형태도 변하고, 생산양식도 변하고 소비패턴도 변하며, 국토의 지형 자체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남아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통문화입니다. 농업은 마을 공동체의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이었습니다. 이런 농업 덕분에 우리는 공동의 취락을 이루며 이웃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공동체 예술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 버린 사회의 구성요건은 수천년을 이어온 농경의 문화를 점점 더 거두어 들입니다. 생산양식의 변화와 주거의 변화 안에서 온전히 보전할 전통적인 유무형의 문화들은 소멸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활문화를 진작한다는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 그 이전정부부터 진행해온 사업의 속내를 보면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습니다. 생활속의 문화를 즐기고 새로운 창조력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에 기반한 것이기 보다는 획일화된 서구식 체험 문화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농촌마을에 댄스교실이 들어서고, 난타교실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한꺼번에 컨트롤 카피를 다 한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전통이 사라진 자리에 국적없는 체험만 번번히 돌아가는 이 현상은 또 어째야 합니까?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행된 문화누리 즉, 문화복지의 사각지대를 구출하고자 했던 사업은 갈수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소비처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그 소중한 정책이 개개인에게 다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개선하고 변경해야 하는데, 정책을 수행하는 집단은 정책 현장 서비스의 질 보다는 개량적 수치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역문화재단이 생기고, 도시재생, 전통시장 살리기, 공공미술, 생활문화센터 등 각종 시설과 지원사업이 바지런히 지역사회를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재단은 광역이든 기초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고 직원이 결정되고, 수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처지입니다. 선출직의 단체장이 갖는 전결의 권한은 누구에 의해서도 제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가 많은 재단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공약까지 성립된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들어 보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든,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예술인복지재단이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검증된 공공단체인 문화재단에 택배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을 위해 택한 택배사업이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지역에 있는 활동가와 단체들이 재단에 줄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과 재단의 갑질이 더 노골화되고, 강화되고, 재단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또 인지하는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리고 저 각종 사업들(도시재생, 문화도시, 시장살리기, 공공미술등)이 지역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를 감당할 만한 지역 문화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용역의 선수가 생겨나고, 지역은 볼멘 소리를 하고, 전국이 그냥 평준화된 사업의 되돌이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극복해야 할지의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지역은 젊은 예술인의 부재, 기획자의 부재, 활동가의 부재적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문화와 전승문화의 맥 또한 단절된 위기에 있습니다.

한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정책은 지역의 이런 사람이 고갈되거나 단종되는 상황을 살뜰히 챙겨놓지 않았습다.

무엇으로부터 근본적 원인이 발생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현장 위주의 정책적 대안이 상재되지 않았습다.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모두 서울에만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

역에 있어도 문화민주화와 지원의 내용에만 집중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역 현장에서 발과 손으로 억척스럽게 부대끼며 마을을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은 털끝만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문화정책은 지역으로 내려와서 현장에서 논의 되어야 하고, 난전이 펼쳐져야 합니다. 지역으로부터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귀기울이고, 부채한 지역 인력의 하방을 권면하는 정책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서 백화제방이든, 백가쟁명이든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문화는 사랑과 관심이 많은데, 관광부분은 또 어떡합니까? 이 또한 산업이전에 삶의 문화인데도 말입니다.

지역문화네트워크

'지역문화네트워크'는 2003년 3월 구성된 지역문화단체들과 문화활동가들의 전국 단위 조직입니다. '지역문화네트워크'는 각 지역의 문화전통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자 만든 단체로 2002년 6월 인천 모임을 시작으로 예산, 광주, 고령, 원주, 정선 등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문화인과 문화단체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네트워크’는 현재 전국의 문화예술인, 문화활동가, 문화단체 모두 1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분권화의 추진,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 정책 및 행정체계의 개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시민의 문화 참여제도 활성화,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네트워크’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2003년 인천 (사)해반문화사랑회, 2004년 광주전남문화연대, 2005년 강원 문화포럼, 2006년 부산 (사)문화도시네트워크, 2007년 대전 한밭문화마당, 2008년 대구 거리문화시민연대, 2009년 인천 (사)해반문화사랑회, 2010년 경주 신라문화원, 2011년~현재 부산 (사)문화도시네트워크가 주관 사무처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네트워크에 뜻을 같이하실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지역문화네트워크' 주관 사무처

2003년	인천 (사)해반문화사랑회
2004년	광주 광주전남문화연대
2005년	강원 문화포럼
2006년	부산 (사)문화도시네트워크
2007년	대전 한밭문화마당
2008년	대구 대구거리문화시민연대
2009년	인천 (사)해반문화사랑회
2010년	경주 신라문화원
2011년~현재	부산 (사)문화도시네트워크

- 지역문화네트워크 창립선언문 -

범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는 전 지구가 단일공동체라는 인식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역과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특히 대 자본을 앞세운 상업주의 지향의 문화는 고유하고도 독특한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인간적 삶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10 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적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고유하고 특성 있어야 할 지역문화는 상업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문화의 확산 앞에 오래 전에 무기력하게 되어버렸다. 중앙 중심적인 행정과 자원의 집중, 그리고 지역주민의 저조한 참여 및 열악한 문화 환경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온상이었음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개선해야할 엄중한 과제가 되었음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문화의 해'로 명명되었던 지난 2001년, 각 지역의 문화전통을 새롭게 재창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자 전국의 지역문화단체들과 문화 활동가들의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지역문화 관계자들은 상호 연대 및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7일-8일 인천에서 첫 모임을 갖고 이어 공주, 광주, 고령의 모임을 거쳐, 경주에서 5차의 준비모임을 갖고, 각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문화인과 문화단체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실천을 위한 지역문화네트워크의 발족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모임은 지역에 산재한 각 지역문화단체나 개인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동안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민간주도 문화 NGO로서 자발적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이 모임은 지역문화활성화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첫째, 지역문화단체나 지역문화인력의 상호교류, 둘째, 지역 문화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셋째, 지역문화에 관련된 연구나 정책의 공동 제시, 넷째, 각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시민문화 형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제 84년 전 우리의 선조 들이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여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던 그 역사적인 날에 우리는 지역문화의 융성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 인식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여 문화로 우뚝 선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감히 선언한다.

- 2003년 3월 1일 지역문화네트워크 창립위원 일동 -

■ 지역문화네트워크 10대 과제

1. 문화분권화의 추진
2.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3. 지역문화정책 및 행정체계의 개선
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5. 시민의 문화 참여제도 활성화
6. 문화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7.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8. 지역문화 재정 확충
9. 지역문화 정보화 촉진 및 문화정보시스템 활성화
10.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창출하는데 힘쓴다.
1. 우리는 지역문화의 주체는 지역주민임을 자각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문화 개발에 봉사한다.
1. 우리는 지역문화가 더 이상 모방과 복제이기를 거부하고 자주적이고 개성있는 문화를 발신하는 밑거름이 된다.
1. 우리는 지역문화네트워크를 넓히고 심화시켜 교류와 협력과 경험을 토대로 참다운 지역문화 시대를 펼쳐 나간다.
1. 우리는 우리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나 국가의 문화정책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간다.

2003년 3월 1일

지역문화네트워크 창립총회에서
참석자 일동

지역문화네트워크 지역문화포럼

2001. 1. 18 ~ 19	‘지역문화의해’ 대토론회(유성)
2001. 12. 20 ~ 21	‘지역문화의해’ 대토론회(서울)
2003. 2. 28 ~ 3.1	창립대회(경주)
2003. 4. 26 ~ 27	지역문화포럼(예산)
2003. 6. 11	지역문화활성화와 문화분권을 위한 대토론회(서울)
2003. 8. 30 ~ 31	지역문화포럼(원주)
2003. 11. 15 ~ 16	지역문화포럼(부산)
2004. 2. 28 ~ 29	지역문화포럼 및 정기총회(인천)
2004. 6. 18	지역문화포럼(대전)
2005. 3. 19 ~ 20	지역문화포럼 및 정기총회(광주)
2005. 7. 16 ~ 17	지역문화포럼(정선)
2005. 9. 3 ~ 4	지역문화포럼(장흥)
2006. 6. 17 ~ 18	지역문화포럼(함양)
2006. 11. 4 ~ 5	지역문화포럼(고령)
2007. 3. 23 ~ 24	제1회 지역문화NGO포럼 및 정기총회(부산)
2007. 9. 1 ~ 2	지역문화포럼(진주)
2008. 3. 29 ~ 30	지역문화포럼(원주)
2009. 5. 22	지역문화포럼 ‘문화다양성과 지역문화’(부산)
2011. 5. 27 ~ 28	‘지역문화의 해 10주년 기념 포럼’(부산)
2012. 4. 21 ~ 22	지역문화포럼(제주)
2013. 4. 5 ~ 6	지역문화포럼(인천)
2014. 6. 13 ~ 14	지역문화포럼(광주)
2015. 8. 28 ~ 29	지역문화포럼(경주)
2016. 8. 27 ~ 28	지역문화포럼(함양)

부산MBC 부설 (사)문화도시네트워크

문화도시네트워크는 부산을 21세기에 걸맞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00년 부산MBC 부설 법인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사업 과제로는 풀뿌리 도시녹화·생태 분야, 시민 주체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 도시디자인 시민운동 분야, 지역가꾸기 문화운동 분야, 시민문화교육 분야, 문화도시 기획사업, 각종 연대·연속/지원사업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네트워크 추진 활동사업>

풀뿌리 도시녹화·생태 꽃도시만들기운동

꽃사랑자원봉사단 설립
‘푸른부산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푸른부산가꾸기 시민운동 전개
푸른부산가꾸기 모니터링 활동
도시녹화 리더양성 교육
「부산을 푸르게」 등 홍보책자 발간

도시디자인 시민운동

‘도시이미지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야간조명계획 점검
해수욕장 경관 점검 모니터링 활동
간판문화 전시회와 토론회 개최
간판문화 모니터링 활동 등 시민운동 전개
도시디자인시민학교 개설
도시경관 감시운동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시민 주체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자원봉사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문화자원봉사아카데미 양성교육
대학생 문화도시기획단 설치 및 운영
시민문화동아리한마당 개최
「시민문화동아리 현황 자료집」 발간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 개최
차없는 거리 문화 활성화 추진
북 콘서트

시민문화교육

2006~7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주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대안교육 모색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특강 ‘스토리텔링’
시민문화강좌 - 마을인문학
고전인문학 ‘맹자, 열하를 건너다’ 강좌
예술인문학 ‘음악 & 사진’ 강좌
예술인문학 미술, 미디어 아트, 색채 강좌
‘브라보! 인생 이모작 학교’ 강좌

지역가꾸기 문화운동

지역가꾸기 문화운동 강좌 개최
마을만들기 강좌 개최
2008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주관(산성마을만들기)
도시문화탐험 추진
디카로 보는 부산 사진집 및 전시회 개최
2010~201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주관(북구 화명2동 대상)
공간문화 연속강좌 개최
2012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만남의 남항시장’ 공동주관
부산시민공원 숲해설/생태·환경교육 운영위탁 공동주최

문화도시 기획사업

시민참여형 문화도시만들기 연속기획 워크숍
문화도시 연구기획사업
지역문화포럼 개최
각종 문화정책 토론회 개최
녹색성장 그린운동 ‘그린DIY 교육’

각종 연대/지원사업

길걷기 시민운동 추진
지역문화네트워크 참여
낙동강네트워크 참여
지방분권 시민운동 참여
부산그린트러스트 참여

기획 및 연속사업

MBC목요음악회 주최
해양생태문화포럼 개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 창단(사회적 기업으로 분리독립)



|48276|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부산문화방송, 7층) / www.cupu.net

전화: 051)761-0255, 760-1494 / 팩스: 760-1495 / cupu@hanmail.net